

#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 NORTH KOREA: FAKE NEWS

(and How to Avoid It)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NORTH KOREA: FAKE NEWS**  
(and How to Avoid It)

건강이상설에 사망설까지 나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공개활동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우리 모두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태는 북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국회(정치권), 국내외 언론,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허위정보 생산-유통-증폭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주체들은 국민적 신뢰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우리는 더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5월 1일 공개활동에 나선 것을 계기로 우리 연구소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통과정과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남북관계, 대북정책, 그리고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국회(정치권),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며,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앞으로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생산-전파-증폭으로 인한 해악을 없애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관련 정보가 반복되는 가짜뉴스의 소재로 더 이상 악용되지 않으면서 정부, 국회, 언론 및 전문가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관련 정보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되고 공유되면서 대북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시키고, 한반도 비핵·평화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 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 관 세

# 목차

## 서문

요약 / Summary ..... 7

I. 북한 관련 허위정보 유통사례 분석·평가 ..... 51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II. 북한 관련 허위정보 확산 현상에 대한 심리적 분석 .... 69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III.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 89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IV.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안보적 영향과 대응 ..... 105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V. 북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언론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자세 ..... 117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요약

Summary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NORTH KOREA: FAKE NEWS  
(and How to Avoid It)

# I. 북한 관련 허위정보 유통사례 분석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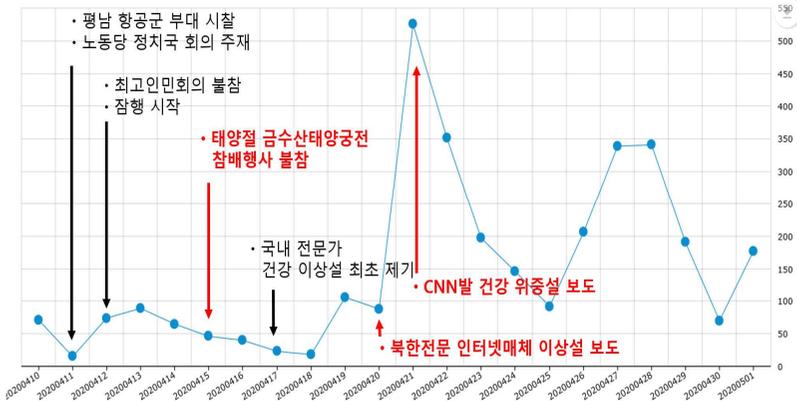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무분별한 가짜뉴스 생산과 이에 대한 우려 증대
- 대북정보의 신뢰성 및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성

## 2. ‘김정은 건강(신변) 이상설’ 언론 동향 분석

-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 국내 54개 언론사의 3,283건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검색일: '20. 5. 4.)

### ○ 기사 추이 분석



## 8.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 I. Examples of the Dissemination of Fake News about North Korea: An Analysis and Evaluation

Kwan-Sei Lee (Direct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1. Research Background

-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spread of “fake news” following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 The need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its impact on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2. An Analysis of Media Trends Regarding Rumors Surrounding Kim Jong Un’s Ill Health

- 3,283 news articles from 54 media outlets in Korea using Bigkinds Big Data Analysis (Search conducted on May 4, 2020)
- Analysis of Trends in Articles Publ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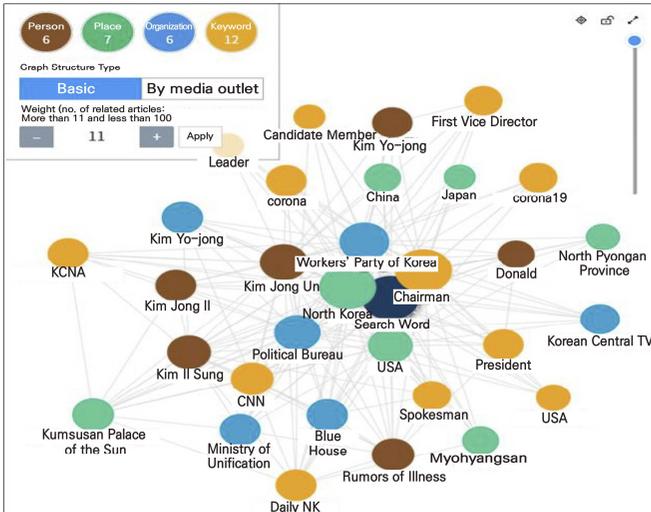
- The start of reporting on rumors of Kim Jong Un's ill health began on April 20 by a North Korea-focused outlet and related articles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CNN reported Kim Jong Un was in "grave condition" on April 21.

○ Related keyword "Word cloud" analysis (from the top-ranking 1,000 articles)



- 'CNN', which amplified the related news via the report of 'health in grave danger', which originated from Chairman Kim Jong-un's 'ill health' and 'Day of the Sun', were featured as related words.

○ Word Relationship Map



- 기존에 ‘김정은’이란 키워드와 많이 연결되지 않았던 ‘평안북도’, ‘묘향산’이 나타난 것은 ‘묘향산 시술(평안북도)’ 관련 뉴스가 생성·확산되었음을 의미함.
- 최초 ‘건강(신변) 이상설’을 제기한 데일리NK와 ‘건강 위중설’로 관련 기사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CNN이 관계도에 나타난 것은 국내 언론들이 두 매체의 기사를 많이 인용했음을 의미함.

### 3. 대북 가짜뉴스의 패턴 및 특징

□ ‘생성 → 전파 및 강화 → 재생산 및 증폭 → 검증’ 4단계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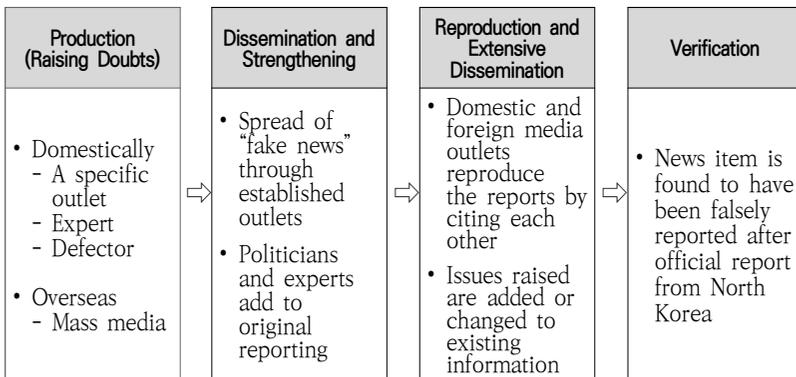
생성(의혹 제기)	전파 및 강화	재생산 및 증폭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언론</li> <li>- 전문가</li> <li>- 탈북자</li> </ul> </li> <li>·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성 가짜뉴스 기성 언론을 중심으로 전파</li> <li>·국내 정치권, 전문가 가세하여 내용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및 해외 언론 상호인용 재생산 및 확산(순환구조)</li> <li>·최초 제기된 문제 외 내용 결합, 변형 및 증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공식 보도 이후 관련 뉴스 오보 확인</li> </ul>

- 생성된 대북 가짜뉴스의 전파 통로는 국내의 기성언론이었으나,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SNS 혹은 개인방송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
- 해외에서 국내로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경우, 해외 유력 언론의 권위에 의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 소홀
  - 주요 외신이나 통신이 세계 주요지도자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향

- The reason that “North Hamgyong Province” and “Myohyangsan” appear despite having been rarely linked with Kim Jong Un in the past is because of the news that Kim had undergone a medical procedure in Myohyangsan.
- The reason that Daily NK, which first reported on Kim’s rumored illness, and CNN, which increased the number of articles after its reporting on Kim’s “grave condition,” both appear on the map is because South Korean media outlets cited both of those outlets profusely.

### 3.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about North Korea

□ Four Stages: Production → Dissemination and Strengthening → Reproduction and Extensive Dissemination → Verification



- The route of the spreading of fake news about North Korea has generally been established in South Korean media outlets, but recently social media and “personal broadcast platforms” have expanded this.
- When fake news is spread from abroad into South Korea, South Korean media outlets fail to properly confirm the reports because of the authority foreign outlets have.
  - Foreign media outlets also fail to properly confirm accurately the facts surrounding the deaths of leaders all over the world.

## [첨부] 대북 가짜뉴스의 주요사례 요약

구분	전개 과정
주요 인사 신변 이상  김정은 건강 (신변) 이상	○ '20.4.11. -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잠적 ↓
	○ '20.4.15. - 김정은 위원장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 ↓
	○ '20.4.17. - 북한전문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제기 관련 일부 언론 인터넷판 보도 ↓
	○ '20.4.20. - 국내 북한전문매체 '김 위원장이 4.12 심혈관 수술 후 특각 에서 치료 중' 보도 * 인터넷판 통해 신속 보도·확산 ↓
	○ '20.4.21. - 일부 언론 지면 보도, 심각성·개연성 제기 - CNN, 美 정부관리 인용 '김 위원장 위중설' 보도 - 원·달러 환율 급등 및 주식 하락 - 국회 외통위 위원장, '평양 완전 봉쇄, 신변 이상' 제기 - 국회의원 당선자 '심혈관 위중, 섭정체제' 제기 ↓
	○ '20.4.22. - 일본 언론 '김여정 작년 말부터 대항준비 진행' 보도 ↓
	○ '20.4.23. -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실상 사망' SNS에 게재 - 국회의원 당선자 '김평일 유력설' 제기 - 일본 언론, 코로나19 확산으로 김 위원장 원산 이동 가능성 제기 * 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보도자료 통해, '특이한 북한 내부 동향' 발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 '20.4.24. - 국회의원 당선자 '거동 못하는 상태' 언급 - 일부 국내 언론 '김정은 원산 체류 및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설' 제기 ↓
	○ '20.4.25. - 로이터 통신 '중국 의료 전문가 등 대표단 파견' 보도 ↓
	○ '20.4.26. - 일본 언론, 50여명의 중국 의료진 급파 보도 - 38노스, 김정은 전용열차 원산 정착 확인 보도 및 '코로나19 피신설' 부상 * 통일부 장관, NSC 상임위원회 발표내용 및 국회 상임위에서 '북 내부 특이동향 없음'을 강조하는 등 유관기관들의 일관된 대응

## [Attachment] A Summary of Major Examples of Fake News about North Korea

Category	Example Name	How it Spread
Rumors Surrounding High-Level North Korean Officials	Kim Jong Un in Ill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11. - After chairing a politburo meeting, Kim disappeared</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20.4.15. - Kim did not show up to the Kumsusan Palace of the Sun ceremony</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20.4.17. - A North Korea expert suggested that Chairman Kim may be suffering from an illness. Some media outlets report this on their online news platforms and suggest that something may have happened to the North Korean leader</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20.4.20. - Daily NK reports that Kim is convalescing at a villa after undergoing a cardiovascular procedure on April 12. This report spreads quickly through Internet-based news outlets</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20.4.21. - Some media outlets report the story in their hard-copy editions, speculating on the gravity and probability of the story CNN quotes a US government official who states that the US government is monitoring Kim’s “grave condition” The KRW-USD exchange rate dips along with stocks The head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suggests that Pyongyang has been “completely shut off” and that something has happened to Kim National Assemblyman-elect claims that Kim is in “grave condition” after a cardiovascular procedure and that someone other than Chairman Kim is running the country</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20.4.22. - Some media outlets report that Kim Yo Jong has been preparing to take over from Kim Jong Un since late last year</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20.4.23. - On his social media account, the chairman of the WNPf claims that Kim has died National Assemblyman-elect suggests that Kim Pyong Il could take over as leader Japanese media speculates that Kim Jong Un is in Wonsan to avoid COVID-19 * After an NSC standing committee meeting, the NSC releases a press release stating that “no unusual movements” have been detected in North Korea</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20.4.24. - National Assemblyman-elect mentions that Kim Jong Un is “unable to move” Some South Korean media outlets claim that Kim is in Wonsan and is “quarantining” himself due to COVID-19 fears</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20.4.25. - Reuters reports that China sent several medical experts into North Korea</li> </ul>

구분	전개 과정
주요 인사 신변 이상	<p>김정은 신변 (건강)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27. - 국회의원 당선자 SNS 및 CNN·국내언론 인터뷰 계기로 ~29. '김정은 건강(신변) 이상설' 재생산</li> <li>○ '20.5.1. - 국회의원 당선자 '지난 주말 사망, 99% 확진' 발언</li> <li>○ '20.5.2. - 김정은 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공개 활동 보도</li> </ul>
	<p>김영철 숙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2월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언론에서 김영철, 김혁철 신변 이상설 제기</li> <li>○ '19.5.31. - 국내 유력 언론, 대북소식통 인용 '김영철 노역形, 김혁철 총살'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YT '워싱턴 관가에서 누구도 반박 정보를 언급하지 않음' 보도</li> <li>-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과 외신에서 신속히 인용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력 언론, '평양의 숙청바람' 등 제목으로 수차 보도</li> </ul> </li> </ul> </li> <li>○ '19.6.3. - 국내 유력 언론, 미·일 관리 발언 및 외신 동향 소개</li> <li>○ 보도 4일 후 김영철(6.2.), 김여정(6.3.),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에 동행</li> </ul>
	<p>김경희 독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12월 - 장성택 숙청 이후 김경희가 나타나지 않자, 국내외 언론에서 위독설, 뇌졸중설, 자살설 등 신변 이상설 지속 제기</li> <li>○ '15.5.11 - CNN, 고위탈북자 인용 '김 위원장이 '14.5월 김경희 독살' 보도</li> <li>○ '15.5.12 - 국내 주요 언론, 뉴스특보로 비중 있게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후 다수 언론이 탈북자·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산·증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탈북자, '제보자 1월 탈북 박재경 부부장 추정, 김경희 독살'</li> <li>● 전문가, '제보자 김정은 비자금 관리책, 중앙당 부부장급'</li> </ul> </li> </ul> </li> <li>○ '20년 초, 김경희가 '13.9월 이후 6년 4개월 만에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에 등장</li> </ul>

Category	Example Name	How it Spread
Rumors Surrounding High-Level North Korean Officials	Kim Jong Un in Ill Health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26. - Japanese media reports that around 50 medical experts from China were "urgently" sent to North Korea</li> <li>- 38 North reports that Kim's train is in Wonsan and this leads to speculation that he is in "hiding" there due to COVID-19 fears</li> <li>* At a National Assembly hearing, the minister of unification emphasized that there are no "special movements" in North Korea based on the NSC standing committee press release and other agency reports</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27. - Speculation surrounding Kim's health continue after National Assemblyman-elect conducts interviews with CNN and South Korean media along with posts on his social media account</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1. - A National Assemblyman-elect said that he was 99% sure that Kim had died last weekend</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2. - Kim makes an appearance at a ceremony celebrating the completion of the Suncheon Phosphate Fertilizer Plant</li> </ul>
Korean Officials	Kim Yong Chul Purged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 - Speculation began over the fate of Kim Yong Chul and Kim Hyuk Chul after the US-DPRK summit in February 2019</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31. - Influential South Korean media outlet cites North Korean sources that Kim Yong Chul was sent to forced labor and Kim Hyuk Chul was shot</li> <li>- NYT reports that nobody refuted that information in Washington DC</li> <li>- Yonhap and other South Korean outlets and foreign outlets report on this</li> <li>* Influential South Korean outlet reports on "surge in purges" in Pyongyang</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3. - Influential South Korean outlet runs statements from US and Japanese officials and foreign outlets</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m Yong Chul accompanied Kim Yo Jong and Kim Jong Un on public appearances four days after these reports</li> </ul>
	Kim Kyung Hee Poisoned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12 - When Kim Kyung Hee did not appear in public after Jang Song Thaeak was executed in December 2013,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media continued to speculate that she was in "grave condition," had suffered from a stroke or had committed suicide</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5.11 - CNN reported on May 11, 2015 citing a high-level defector that Kim Kyung Hee had been poisoned in May 2014</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5.12 - South Korean outlets report this as headline news</li> <li>- The story flooded the media through interviews with defectors and expe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igh-level defector claims, perhaps Park Jae Kyung who defected in January, claims Kim Kyung Hee was poisoned</li> <li>• Expert claims that the source was a manager of Kim Jong Un's secret funds and member of the Central Committee</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m Kyung Hee was seen appearing with Kim Jong Un (at a performance commemorating the Lunar New Year's holiday) in early 2020, six years and four months after her "disappearance" in September 2013</li> </ul>

구분	전개 과정
주요인사 신변이상	<p>김일성 피격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11.16. - 국내 유력 언론, 일본 외교소식통 및 휴전선 동향 등을 토대로 '김일성 피격 사망설' 최초 보도</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86.11.18. - 국내 유력 언론, 김정일 실각說, 군부 저격說 등 재차 보도</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김일성 최초 식별 11.10. 이후 재등장 北, 11.18.까지 7일간 언론매체 통해 선물·축전 등 김일성 동정 보도</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86.11.19. - 김일성 주식 몽골 국가원수 영접 공개 활동으로 '신변 이상설' 해소</li> </ul>

Category	Example Name	How it Spread
Rumors Surrounding High-Level North Korean Officials	Kim Il Sung Shot to De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11.16. - South Korean media reported that Kim Il Sung may have died based on Japanese diplomatic sources and reports from the 38th Parallel ↓</li> <li>○ '86.11.18. - There were reports that Kim Il Sung had been ousted and that he had been shot to death by the military (November 18, 1986) ↓</li> <li>○ For seven days from November 10 until he reemerged on November 18, media outlets expressed sympathy about the death of the North Korean leader ↓</li> <li>○ '86.11.19. - Speculation was quieted after Kim Il Sung reappeared at a meeting with the head of Mongolia on November 19</li> </ul>

## II. 가짜뉴스 확산 현상에 대한 심리적 분석

### □ 가짜뉴스는 전세계적 사회적 병폐

-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설 등, 안보불안 조장하고, 환율 상승, 주가 하락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 현정부의 기조인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 저해 등,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가 범람함.
-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과 유럽의 대선, 코로나19 사태 중 국 관련 가짜뉴스 등 전세계적인 사회적 병폐임.
- 이동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대안 언론의 등장, 일반 대중들의 정보 취득 및 공유가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가짜뉴스가 일단 생산되면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남.

### □ 가짜뉴스 행위자의 구분

- 가짜뉴스 범람 현상과 관련되는 행위자를 크게 생산자, 확산자,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동기는 양극화된 정치적 진영 내에서의 사이버 심리전적 의미와, 경제적 이득 창출을 위해 대중을 현혹하기 용이한 선정적인 정보의 생산 및 유포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II. A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Spread of Fake News

**HyungJong Lee**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Fake News and Social Decay

- The recent reports about Chairman Kim Jong Un's ill health/death along with other examples of "fake news" have caused security concerns to spike, currency rates to fluctuate, and stock prices to fall among other economic damage.
- The issue of "fake news" is not limited to South Korea. Fake news reached critical levels during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can be seen in news about China and the COVID-19 crisis, and has even led to social decay in Europe.
- The dissemination of fake news, or slander of other individuals or groups, is as old as human civilization itself. However, its dissemination is no longer a local problem but a national issue, as today's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low ordinary people to acquire and share information easier than ever before, rendering globally-connected populations susceptible to fake news.

### Spreading Fake News: The Actors

- The groups involved in fake news can be categorized as pro-

○ 가짜뉴스 확산자는 생산자의 동기를 일부 공유하는 집단과, 가짜뉴스의 이용자임과 동시에 확산자 역할이 중첩된 개인 및 공동체로 구분됨.

#### □ 가짜뉴스 생산자의 심리적 특성

○ 가짜뉴스의 생산 및 보급자는 사이버 심리전에 참전한 군인의 심리와 유사한 특성을 보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득을 위해 강한 사명감과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무장하였기에, 외부 집단을 음해하려는 시도로써 사이버 심리전에 참전한 이들에게는 죄책감이나 양심은 은폐됨.

○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연민과 공감, 죄책감은 강한 사명감으로 축소되며,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투에 참전한 군인이나 자신의 신념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은 순교자와 같은 심리상태를 보임.

○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나 윤리적 문제제기는 효과를 보기 어려움.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에 균형잡힌 정치적 정보의 증가, 입장이 다른 타인과의 연대감 활성화 등, 첨예한 정치적 대립 구도에서 파생되는 순교자적 사명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회 전반의 치유를 통해 해결 가능함.

#### □ 가짜뉴스 확산자의 심리적 특성

○ 가짜뉴스의 보급 및 확산에 일부 윤리의식과 전문성이 저하된 언론계 종사자들도 관여하나 이는 언론계의 성찰과 자정작용을 통해 개선될

ducers, spreaders, and consumers.

- Producers may produce fake news to promote a particular political belief, and may also collect economic benefits for doing so.
- Spreaders of fake news share similar motivations with producers, and can also be consumers of fake news.

#### □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oducers**

- The psychology of producers and disseminators of fake news can be likened to that of soldiers involved in Internet-based psychological warfare. These “soldiers” have no sense of shame or regrets about sharing fake news, which is aimed at maximizing the benefits of their own group at the expense of others.
- The producers of fake news arm themselves with a strong sense of duty and purpose and conceal any feelings of pity, sympathy, or responsibility for the pain they inflict on others. They care nothing about the criticism they receive for spreading fake information and shar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at of martyrs or soldiers ardently devoted to a cause.

#### □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preaders**

- Members of the media are often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spread of fake news. These individuals tend to lack ethics and/or expertise. Their spread of fake news for economic gain is a more serious issue. The lack of ethics and morals of such

여지가 있는 부분임. 이보다 경제적 이득 창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동기의 확산자는 윤리와 도덕성이 부재하므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 가짜뉴스를 소비한 개인은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연대감을 느끼기 위해, 또는 타인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불안정한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적 동기로서 가짜뉴스를 전파하려는 행동을 보임.
- 특히 기독교 관련 공동체의 복음 전파와 같은 순수한 이타적 동기로서, 내집단에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나 가능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며, 보다 사적인 동기로서 내집단 내에서 돋보이거나 소속 집단 내에서 연대감을 느끼기 위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전파하려는 행동이 나타남. 이러한 심리적 동기로 인한 가짜뉴스의 전파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자 내집단 응집력이 강한 공동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가짜뉴스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

- 가짜뉴스는 연령과 교육수준, 정보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강력한 영향을 끼침. 특히 신념이나 견해가 확고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가짜뉴스로 인해 부적절한 신념, 정치적 견해가 생성 및 강화될 우려가 높음.
- 효율적 정보처리를 위해 진실 여부가 불분명한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동기화 추론과 확증 편향과 같은 인지적 처리기제가 발동하여, 자신이 알고 있거나 믿는 내용과 유사한 가짜뉴스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

individuals summons the legal question of punishment.

- Ordinary people, faced with the uncertainties of modern society, view fake news and share it with others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o strengthen their bonds with other people, make themselves look interesting, or improve their own troubled sense of being.
- Fake news tends to spread easily within religious groups and among the socially vulnerable,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regardless of age or educational background.

#### □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 The more socially vulnerable someone is—due to age, educational background, or ability to acquire information, etc.—the greater the potential impact fake news will have on them. For young people who have yet to form strong opinions or beliefs, fake news can create inappropriate beliefs, or produce or strengthen certain political opinions within them.
- The mechanisms of efficient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the theory of motivation and confirmation bias, act together to create a sense of certainty about fake news one sees while other information closer to the truth yet in disagreement with the phony reports is selectively ignored.
- Some consumers of fake news want to heighten their solidarity with others or improve their own sense of importance. Fake news may strengthen their beliefs, and thus they then try to actively share that news and those beliefs with others.

거나,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진실과 보다 가깝다고 느끼는 정보들이 선택적으로 무시될 수 있음.

- 가짜뉴스 소비자의 일부는 타인과의 연대감을 위해서나 자기고양 동기로 인해 가짜뉴스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공고화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음.

#### □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대응

- 가짜뉴스 확산 현상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자정작용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선, 균형잡힌 정치적 정보의 전파 등,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 분명 존재함.
- 가짜뉴스 생산자 중 공고한 정치적 신념에 따른 사명감 있는 행동의 경우, 개인적 도덕성이나 양심은 거대한 사명감 앞에 은폐되었으므로 교정 및 교육적 개입은 효과를 보기 어려움.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에 따른 이차적 이득의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일 것.
- 건전한 여론 형성과 정부의 정책 발현을 저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생산 및 취급자의 윤리의식 고취와 더불어 양극화된 정치적 집단의 성찰이 요구됨.

## □ How Should We Respond to the Spread of Fake News

- The spread of fake news creates and/or intensifies social divisions and prevents the realization of policies based on broad societal agreement. Among the efforts needed to prevent the spread of fake news, there is a need to promote balanced communication between polarized political groups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of ethics among information producers.
-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responding to the issue of fake news is not moral-based criticism or punishment of behavior based on strong political beliefs; rather, efforts need to focus on creating a strong system to remove the link between producing fake news and acquiring secondary gains.
- Strengthening of ethics of producers and consumers of fake news, along with self-reflection among members of polarized political groups are needed to prevent the spread of fake news, which only serves to harm healthy public discussion, prevent government policies from being realized, and incite social disruption.

### Ⅲ. 북한관련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 1. 북한관련 허위정보 생산의 조건

- 북한관련 허위정보는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일종의 ‘인포데믹(infoademic)’ 현상이 되면서 남북관계 뿐 아니라 남한사회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남한 사회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북한 정보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은 북한 관련 정보 허용 폭 자체가 확대되었으나,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보수언론 및 조직화된 보수적인 시민사회가 국가와 대립하면서 보수적인 대북정보를 독자적으로 수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음.
- 범지구화 경향으로 초국가적 이주가 활성화되면서 외부 정보의 유입이 활성화되었고,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정보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 월경이 일상화되면서 제한되었던 북한 관련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음.
-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났고, 이들이 북한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종합편성방송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일부 언론에서 탈북자를

### III. The Societal Impact of Fake News Concerning North Korea and How to Respond

**Woo Young Le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1. The Conditions that Produce Fake News about North Korea

- The production of fake news regarding North Korea is an important social issue given that it has become somewhat of an “infodemic”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and because it impacts both inter-Korean relations and South Korean society at a certain level.
- The increasing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has led to a weakening of the state’s monopolistic hold on information regarding North Korea. While relatively progressive governments have allowed mor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to flow into the public sphere, conservative media outlets, along with an organized conservative-leaning civil society, that criticize the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imed at bringing about inter-Korean reconciliation, have conflicted with the state and have begun efforts to collect politically conservative-oriented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independently.
-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movement between nations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information flowing between them. A great deal of 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 is included in this broader flow of information and increasing informatization has made it possible for information to flow

기자로 채용하면서 탈북자들이 북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공인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정보화의 진전으로 개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수적인 유튜브 채널 등도 급증하였고, 정치사회적 관심 유도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적인 북한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2. 북한관련 허위 정보의 특징

- 북한관련 허위 정보는 최고 지도자 및 중요 정치 엘리트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고로 인한 권력상실이나 처형 등 부정적인 차원의 신상정보가 중심이 되고 있음.
- 최근 북한관련 허위정보가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현 정부를 포함한 진보적 정부의 평화지향적인 대북정책의 정당성 훼손
  - 북한의 비정상적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지향
  - 허위정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 획득
- 최근 북한관련 허위정보는 국내 탈북자단체 혹은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 국내 유튜브나 뉴미디어 언론 소개 → 해외 언론 소개 → 국내 레거시 미디어 소개 → 정치권의 증폭의 순서로 확대 재생산 되는 경로를 밟고 있음.

across borders on a daily basis. Now, information regarding North Korea which was inaccessible in the past is freely being disseminated.

-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settled in South Korea has increased and they have taken on the role of providing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Cable TV shows have found success in airing programs featuring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some media outlets have hired defectors as journalists. This has allowed them to become recognized officially as “messengers” of information regarding North Korea.
- The rise of the information age has led to a massive increase in “personal media outlets.” This has led to a huge number of conservative-leaning YouTube channels, and these personal media outlets are actively using titillating 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 to gain both interest from the political and social spheres and to gain economic benefits.

## **2.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Regarding North Korea**

- While most of the fak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involves the Supreme Leader and major members of the political elite, a great deal of this fake news concerns the loss of power due to a death or other negative news such as executions.
- Fake news concerning North Korea recently is focused on:
  1. Damaging the justifications of current and past progressive governments promoting peace-oriented policies toward North Korea;
  2. Placing emphasis on the abnormal nature of North Korean society to promote an atmosphere of con-

### 3. 북한관련 허위 정보의 대내적 효과

- ‘남남갈등’을 유화적 대북정책과 무능한 정부의 통합정책으로 연결시켜온 보수야당과 언론 등은 북한관련 허위정보를 생산 유통하면서 남남갈등을 자극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음.
- 분단체제 하에서 한국사회는 근본적으로 북한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최고위층의 유고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와 관련된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자극할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적대감 및 일반적인 현실에서 북한관련 허위정보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반복의식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최근 북한관련 허위정보의 전달자 혹은 생산자로 탈북자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허위정보임이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해 있는 탈북자 전체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음.

### 4. 북한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 북한관련 정보에서 정부와 민간이 양자적 대립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북한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민간 부분과 더불어 정보의 진위여부나 해석여부가 논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frontation while also aiming to bring about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3. Acquire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spread of fake news.

- Recent examples of fake news regarding North Korea have spread through the following route: 1) a defector organization or individual defector expresses an opinion; 2) a South Korean YouTube channel or “new media” outlet introduces the opinion as news; 3) the report is published by foreign media; 4) established South Korean media outlets report on it; and 5) the report spreads into South Korea’s political sphere.

### 3. The Domestic Impact of Fake News Regarding North Korea

-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and media outlets have long connected South-South conflict with a “flexible” set of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he integration policies of “incapable” governments. In short, they have produced and disseminated fake news about North Korea to encourage South-South conflict.
- South Korean society faces a “North Korea risk” given the continue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eath of someone in the highest echelons of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could damage the stabi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spread of such fake news could create instability in South Kore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pheres.
- Fake news about North Korea stresses the “abnormal” nature of North Korea and increases anti-North Korean feelings among South Koreans.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 정보 통제를 넘어서서 북한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푸쉬서비스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시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북한관련 허위정보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 언론 관련 단체의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북한관련 허위정보를 제소하고 시정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함.
- 언론기관에서는 북한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북한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Defectors have grown in importance as messengers and producers of fake news about North Korea. Ultimately, once the reports they spread are revealed as fake news, South Koreans will lose confidence in both them and the wider defector community.

#### 4. How to Respond to Fake News about North Korea

-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hould not be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about 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 Instead, the government should shar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should work with civil society to verify information together.
  1. The government must make public as much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s possible.
  2.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need to consider implementing a service to publiciz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to help move beyond restrictions on information regarding the country.
- Civil society, not the state, should work to remove fake news about North Korea, which means there is a need for media related organizations to play a more active role.
  3. Consideration must be made into creating the basis for reporting and arbitrating fake news about North Korea to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 Media organizations must cultivate experts on North Korea to ensure they report accurately on the country.

## IV.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안보적 영향과 대응

### 1.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안보적 관점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끼리 정보를 주고 받으므로 더 극단화되는 진영논리에 갇힌 집단극화 현상으로 '확증편향' 표출
  -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분명한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생성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 관련 가짜 뉴스는 단순히 관점의 차이나 정보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와 의도에 의한 확장성과 지속성의 결과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생성 전파하는 주체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내외 집단이나 그 이상의 이해국가일 수도 있음.
  
- 김정은 건강문제는 한반도 문제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재발생 가능성과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의 안보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
  - 김정은 신변이상설의 생산과 확산이 최근 코로나 사태, 총선 결과, 그리고 미국의 대선 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

## IV. The Impact of Fake News about North Korea on National Security and How We Should Respond

**Dong-Yub Kim**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1. Looking at “Fake News” about North Korea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 “Fake news” about North Korea is shared by people with the same kind of thinking and is an expression of confirmation bias due to groupthink based on ever-more extreme political logic.
- Fake news is produced and disseminated by a wide range of actors with clear motives and goals. This means that “fake news” about North Korea is not just based on a simple “difference in opinion” or “lack of information”; rather, it is based on intentional efforts by various actors to disseminate their opinions broadly.
- “Fake news” about North Korea is not spread for personal reasons; it is spread by groups in South Korea and abroad and could match up with the interests of a particular country.
- The health of Kim Jong Un is an extremely important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 exists the perennial concern that another round of fake news regarding the leader could erupt into a national security issue.
- The dissemination of news about Kim Jong Un’s ill health should be viewed carefully given that it may be related to the COVID-19 situation, the results of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 2.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

- 북한 가짜뉴스는 남북기본합의서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현 정부의 평화변영의 대북정책에도 위배
  - 김정은 신변이상설과 이에 따른 후계체제논의, 급변사태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북한의 잠재적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
  -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의 생성 유통은 오히려 북한발 가짜뉴스로 역이용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
  
- 남북관계 확대 및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 조성
  - 우리사회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되면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부정적 요인이나 협상 시에도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안보불안과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어렵게 함.

## 3. 불필요한 안보 비용 초래 및 외교안보정책 추진에도 부담

-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시민들의 안보 불안감 확산
  
- 우리 군의 경비태세 및 군사적 위기대응 차원에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 초래

## 2. Damag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Fake news about North Korea runs counter to the spirit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also violat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lans to unite the two Koreas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s desire to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the Korean Peninsula.
  - Fake news about North Korea, which includes news about Kim Jong Un's ill health or discussions on succession or an "unexpected event" in North Korea, potentially creates discontent in North Korea and may lead to an impasse in inter-Korean relations.
  - The spread of fake news in South Korea about North Korea may also lead to a situation where "fake news" produced in North Korea also becomes reported in the media.
- Obstacles to Expand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If "fake news" about North Korea continues to be produced in Sou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could face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future and could provide North Korea with pretexts during negotiations.
  - The spread of "fake news" also increases national security fears in South Korean society and deepens distrust toward North Korea. Altogether,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move forward with its policies.

-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안보피로감 누적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 및 안보불감증 초래
-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장애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 상실
-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으로 하여금 실제 충돌의 위험이나 아무런 책임질 일 없이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고 긴장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오판 가능성

○ 코리아리스크 심화와 대외국가 신뢰도 감소에 따른 외교정책 추진 장애

- 우리 내부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이해 및 정보능력은 물론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주변 이해국가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 제공

#### 4.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안보적 대응

-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정치화 및 안보문제화 억제를 위한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의 협력적 노력 필요
-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정쟁화는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치권의 인식 필요

### 3. Creates Needless National Security Costs and Stymies Diplomatic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 Fake news about North Korea creates anxiety among the people toward national security.
- Fake news also creates unnecessary labor and costs by South Korea's military to maintain a state of alert and react to military crises.
  - The “national security fatigue” created by fake news accumulates to create gaps in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related anxieties.
  - It damages the stable management of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peninsula and destroys opportunities to take advantage of new engines for improvement.
  - Fake news may induce North Korea to place all the blame on South Korea for a real flareup in tensions and could lead to misjudgment by that government.
- Deepens the risk to Korea and damages diplomatic policies due to falling trust with other countries.
  - Fake news about North Korea in South Korea contributes to decreased trust in South Korea's understanding about North Korea, its ability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and trust in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Fake news about North Korea also provides pretext for other countries to get involved in the Korean Peninsula's issues.

-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안보국방 관련 전략커뮤니케이션(SC) 활성화와 DIME(외교, 정보, 군사, 경제) 요소 체계적 통합 관리
- 국민들의 객관적이고 양질의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 북한 정보에 대해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 모색
  - 북한전문가, 학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협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양질의 북한 정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여 국민들에게의 가짜 뉴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면역체계 강화
- 외국 언론이나 외국전문가들의 북한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이 중요

#### 4. A National Security-based Response to “Fake News” about North Korea

- There is an imperative for the government, political sphere, and civil society to work together to prevent the politicization of fake news about North Korea.
  - The political sphere must understand that arguments over “fake news” about North Korea damage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 There is a need to energize “strategic communication” and implement systematic management over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ics) in regards to “fake news” about North Korea.
- The expansion of access to high-quality and objectiv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 Find ways to permit broad dissemination of North Korea-related information.
  - North Korea experts, academics, and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must work together to create high-quality and trustworthy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to ensure ordinary people can think critically about “fake news.”
- It is imperative to help foreign media organizations and experts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r correct misunderstandings about North Korea.

## V. 북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언론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자세

- 향후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확대재생산 방지를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엄격한 자기검열, 특별한 성찰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 언론과 전문가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평화저널리즘 지향)** 흡수통일과 조기 정권봉괴를 희망하는 사고에 기초해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키는 분단저널리즘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음.
  - 북한 문제를 다루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달성되는 데 기여해야 함.
  
- **(언론 스스로의 자정기능 강화)** 엄격한 처벌규정 등 언론에 책임을 물을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일단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언론윤리강령(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는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북한 관련 보도 준칙의 제정과 준수)** 정치적 양극화와 편향된 정보 선택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이 가속화하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보도 준칙을 만들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 V. The Desirable Role and Attitude of Members of the Media and Experts

**Eul-Chul Lim**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Members of the media and experts should conduct strict self-censorship, reflection, and take special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fake news regarding North Korea in the future.
  - The following steps are proposed as a way to guarantee that members of the media and experts ensure they adhere to desirable roles in reporting on North Korea.
- **(Move Toward “Peace-oriented Journalism”)** There is a need to move away from journalism aimed at creating ungrounded distrust and hatred toward North Korea, along with conflict and division in South Korean society, that is based on the hope that South Korea will absorb North Korea or that North Korea’s government will collapse.
  - Media outlets that deal with North Korea-related issues should contribute to long-las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rengthen the Media’s Ability to Self-censor)** Given the lack of heavy punishment or other legal devices aimed at holding media outlets responsible for their reporting, there is a need for media companies to follow the “Journalism Code of Ethics.”

- 근거가 불확실한 북한 관련 보도는 반드시 정부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등의 준칙 제정의 목적이 담겨야 함.

○ **(언론사 자체의 정보판단 역량강화와 정부의 협조)** 언론사 스스로 북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량을 강화해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최대한 북한 관련 정보를 언론 및 전문가 집단과 보다 폭넓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오보 방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가능케 하는 남북 간 협력시스템 도입)** 남북 간에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 오보, 심지어 날조 보도 등과 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를 취하면서 오보 방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남북대화 복원 계기 시에 남북 간 언론교류를 우선 의제로써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 **(전문가 집단의 윤리의식 제고와 새로운 분석틀 제시)** 평화로운 시기보다 위기의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북한 관련 오보와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윤리의식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북한 체제의 독특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기존의 보수적 분석틀에 매몰되지 않고 이전과 다른 다양한 변화 실상 등에 주목하면서 북한 현상을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음.

- Section four of the Journalism Code of Ethics (Newspaper Code of Ethics) states that “Our journalists will accurately, objectively and fairly report on all aspects of the facts at hand.”
- **(Establish and Ensure Adherence to Basic Rules Governing Reporting on North Korea)** To prevent the worsening of an “infodemic” where unverified information is spread based on political inclinations or selective facts, a prominent media-related organization must create a basic set of guidelines for media outlets to follow.
  - These guidelines should ensure that reports based on unclear evidence regarding North Korea should only be written up as articles after consultations with government officials or experts and that the reports do not harm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ter-Korean relations as part of a “great race” to release articles faster than competitors.
- **(Media Companies Should Strengthen Their Ability to Judge Information They Receive and Should Work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Media companies need to have a system to independently analyze information from North Korea and need to strengthen their abilities to analyze this information to ensure their reporting is as verifiable as possible.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quickly build a broad-ranging system together with the media and expert groups regarding reporting on North Korea.

-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표현과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토론이 이뤄지도록 이끌어야 함.

- **(Introduce a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Prevent False Reports and Enable the Publishing of Corrections and Rebuttals)** Basic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South Korea's media environment to reduce the amount of fake news, false reporting, and even fabrications that increases distrus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Meanwhile, the government should pro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prevent false reporting and enable the publishing of corrections and rebuttals.
  - The government should place media exchanges as a priority in the agenda to discuss with North Korea when inter-Korean talks resume and take a lead in managing those discussions.
  
- **(Strengthen the Awareness of Ethics Among Expert Groups and Present a New Framework of Analysis)** The negative impact of false reports and fake news regarding North Korea that flow into the media during times of crisis more than times of peace are critically damaging to South Korean society. This situation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experts along with the need for them to have a strong awareness of ethics.
  - With a basis of understanding about North Korea's unique characteristics, there is a need to analyze and evaluate events in North Korea outside the limits of the existing conservative framework of analysis and to focus on the various changes in the country that contrast with the past. Media outlets must take the lead in ensuring that a rational and logical discussion takes place about North Korea by using fair, accurate, and objective expressions and terminology.



# 북한 관련 허위정보 유통사례 분석 · 평가

이 관 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무분별한 가짜뉴스 생산과 이에 대한 우려 증대

○ 뉴스 플랫폼의 온라인화, 인터넷신문 진입제한 부재, 뉴스 역할과 제작 및 소비 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 증대

- 가짜뉴스가 잘못된 프레임으로 유통될 경우 여론 왜곡 및 안보불안 등을 야기 시킴.

○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가짜뉴스는 오랜 기간 여론조작을 위한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이용

- 가짜뉴스는 크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구분되지만, 불법 혹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 대북정보의 신뢰성 및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성

○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바, ‘카더라’성 추측기사, ‘아니면 말고’식 보도에 취약

- 가짜뉴스가 갖는 대북정보의 왜곡·조작으로 인해 국민들의 객관적 정보 판단 제한 및 대북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 남북관계 개선·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북한 최고책임자의 신변 변화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추진동력 약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불안 등 혼란 야기 가능성
  - 가짜뉴스의 파급력을 감안,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내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이를 고려해야 함.

## 2. 대북 가짜뉴스의 주요 사례 분석

### ❖ 사례: 김정은 건강(신변) 이상설

#### □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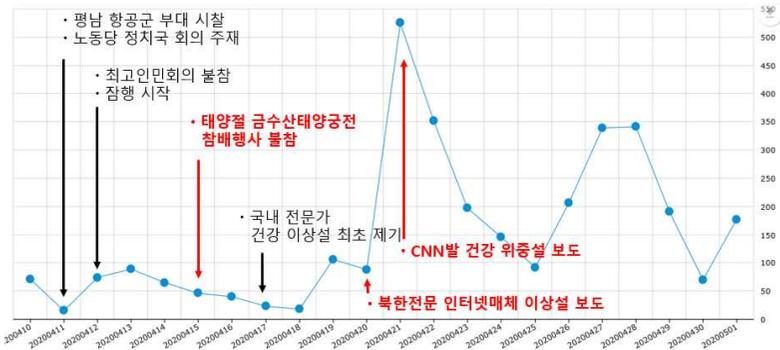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20년 4월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잠적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14기 3차 회의가 4월 10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12일로 연기되었으며 김 위원장은 불참함.
  - 북한 매체들은 당 정치국 회의 참석(4. 11. 오전) 직후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 시찰’(4. 11. 오후, 4. 12. 조선중앙통신 보도) 이후 공개 활동 미보도
-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최초로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4. 15.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행보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 제기
  - 북한 매체(4. 16.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는 당·정·군 간부들의 참배 소식만 보도함.

## □ 김정은 건강 이상설 언론 동향 분석

### ○ 방법: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 대상: 국내 54개 언론사<sup>1)</sup>의 뉴스 기사 3,283건(검색일: '20. 5. 4.)
- 분석 기간: '20. 4. 10. ~ 5. 1.
- 검색 키워드: 김정은<sup>2)</sup>

### ○ 기사 추이 분석



-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 보도(4. 12.) 이후 최초 건강 이상 제기 전까지 김정은 위원장 관련 기사 수는 하향세를 보임.
- 국내 전문가에 의해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제기 (4. 17.)된 이후 관련 기사들의 증가·확산까지 약 2일 소요됨.

1)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 54개 언론사.

\*세부 목록은 빅카인즈([www.bigkinds.or.kr](http://www.bigkinds.or.kr)) 검색 참조.

2) [(김정은) O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OR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OR (김정은 위원장) OR (김정은 국무위원장) OR (김정은 조선노동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OR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OR (김정은 위원장) OR (김정은 국무위원장) OR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OR (국무위원장) OR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원장) OR (김정은 북한 위원장) OR (김정은 북한 국무위 장) OR (김정은 북한 국무위) O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O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OR (김정은 북한 위원장) OR (김정은 북한 위원장) AND (부위원장) OR (국무위원회) OR (노동당) OR (위원장) OR (북한) OR (중앙군사위) OR (국무위원장)].

- 북한전문 인터넷매체가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건강 이상설’ 보도한 이후(4. 20.) 국내 언론들은 북한전문 매체발 소식인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전파함과 동시에 CNN발 ‘건강 위중설’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기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4. 21.)
-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김정은 건강(신변) 이상설’ 기사가 증폭·재생산됨에 따라 기사수 등락을 보임. (4. 27. ~ 5. 1.)

○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분석 (상위 1,000개 기사) 3)



연관 순위	키워드	가중치 <sup>4)</sup>	키워드 빈도수
1	건강 이상설	323.72	696
2	특이 동향	124.13	460
3	CNN	107.33	966
4	김여정	83.32	1,138
5	청와대	82.37	601
6	신변이상설	80.22	319
7	최고인민회의	79.08	519
8	코로나19	72.86	657

3) 검색 결과 중 분석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 본 분석에서는 총 3,283개의 기사 중 상위 1,000건의 기사에 대한 분석을 진행.

9	태양절	66.43	662
10	트럼프대통령	57.89	272

- 분석 기간(4. 10. ~ 5. 1.) 중 검색 키워드(김정은)와 가장 많은 연관을 가진 단어는 '건강 이상설'임.
  - 이 외에 '건강 위증설' 보도로 관련 뉴스를 증폭시킨 CNN,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신변)이상설'의 발단이 된 '태양절' 등이 연관어로 등장한 것이 특징임.
  - 연관어 '잠행'(가중치: 38.1, 빈도수: 349)의 경우, 잠행 자체 기사와 이전 잠행 기사까지 겹쳐져 생산·확산됨에 따라 연관어로 나타남.
- \*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이번 '건강(신변) 이상설'을 야기한 잠행 포함, 총 4회 공개 활동 (2014년 1회, 2019년 1회, 2020년 2회)을 중단했으며, 그 기간은 103일임.

차수	공개 활동 중단 일수	주요 사항
1차	40일	-잠행 전 공개 활동: '14. 9. 3.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공개 활동 재개: '14. 10. 14. 평양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시찰
2차	22일	-잠행 전 공개 활동: '19. 5. 9. 장거리 타격수단 동원 화력타격 훈련 -공개 활동 재개: '19. 6. 1. 자강도 내 현지시찰
3차	21일	-잠행 전 공개 활동: '20. 1. 25. 평양 삼지연극장 설 기념공연 관람 -공개 활동 재개: '20. 2. 16. 김정일 생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4차	20일	-잠행 전 공개 활동: '20. 4. 11.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제 -공개 활동 재개: '20. 5. 1.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4) 토픽랭크 알고리즘에 기반해 출력된 결과.

\*토픽랭크: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에 기반하여 검색한 결과에 대해 공식적 분석과 워드클러스터링을 하여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 □ 전개과정

주체	국내 전문가
구분	Negative - 건강 이상 제기
내용	김정은 위원장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 관련 일부 전문가 '20. 4. 17. 오후 언론에 분석 자료를 송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제기 - "태양절 금수산 불참은 매우 이례적,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나 신변에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4. 17.)
영향	막연한 추측성 문제제기 발생 - 일부 매체들이 당일 온라인판 보도를 인용·보도하고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관련 기사들이 게재되면서 건강 이상설 확산 - '14년 잠행 시 떠돌았던 증권가 소식지에 '뇌사설'까지 언급 -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외신에서도 17~18일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설을 다룬 뉴스 보도



주체	국내 인터넷 언론
구분	Negative - 건강 이상 재점화
내용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4. 12. 향산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 후 특각에서 치료 중'이라고 보도 -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 받았다...여전히 특각서 치료 중" (4. 20.)
영향	김 위원장 동향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해당 보도는 큰 반향을 일으킴.



주체	국내 언론
구분	Negative - 건강 이상 전파
내용	국내언론들은 북한 전문 매체발 소식인 점을 강조하며, 인터넷을 통해 해당 보도를 인용하여 신속하게 전파
영향	다만, 4. 21. 조건에는 일부 언론만 지면 보도, 전문가들은 사안의 심각성·개연성에 초점 (보도 및 정보 출처에 대한 신빙성 논란) - "태양절에 김 위원장만 불참한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 "발목 낭종 재발 가능성,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급변상태로 이어질 가능성 희박" (4. 21. 인터뷰)



주체	해외 언론
구분	Negative - 건강 위증 제기
내용	<p>미국 CNN에서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 '김 위원장 위증설'을 보도하면서 관련 사항 증폭·확대 (4. 21.)</p> <p>일본 언론들도 소식통을 인용, '작년 말 김여정 대행설' 등을 타전하며 CNN 보도의 신빙성을 뒷받침          - "(한·미·일 협의 소식통 인용) 北, 작년 말부터 긴급 상황 발생 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 중" (4. 22. 일본 언론)</p> <p>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기자회견에서 보도 내용은 알고 있으며, 평소 북한을 둘러싼 동향에 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 분석에 힘쓰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함. (4. 21.)</p> <p>[이견] 경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증대설에 대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과 소통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도 로이터에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힘. (4. 21.)</p>
영향	CNN 보도 직후 국내의 언론에서 '김정은 건강(신변) 이상설' 증폭, 원·달러 환율 급등, 주식 하락 등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주체	국내 정치권 및 전문가
구분	Negative - 건강 위증 확산 및 후계 체제 진행 제기
내용	<p>윤OO 외통위 위원장, 장OO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태OO 당선자, 지OO 당선자 등이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을 제기하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들의 발언과 이력을 보도하며 '김정은 건강(신변) 이상설' 재점화          - "김 위원장 신변에 이상설이 제기될 만큼의 징후가 있는 건 사실, 최근 북한에서 평양시를 완전히 봉쇄한 상황" (4. 21. 기자회견)          -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김씨 일가의 동선과 신변은 국가적인 극비사안으로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북중 국경에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 그러나 신변이상설 보도 일주일의 넘은 시점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 (4. 21. 입장문)          -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이며 김정일이 돌아다니다가 쓰러지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 다시 복귀하기 어려워 현재는 섭정 체제" (4. 21. 인터뷰)</p>

- “김정은, 사실상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음. 한마디로 의식불명의 코마(coma) 상태인 것 같음. 김 위원장 회복 불가 판정은 오늘 아침 北 핵심권력부에서 결정” (4. 23. 페이스북)

- “김정은 유고 시 일단 김여정으로 갈 것이나 (김여정은) 60대 간부들에게는 애송이, 김평일과 함께 성장한 北 주축세력들이 김평일을 옹립할 가능성” (4. 24. 인터뷰)

[이전] 특정 방송사는 같은 날(4. 24. 인터뷰)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 김정은의 원산 체류를 포착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설’도 제기

- “북수의 주변인물 코로나19 감염, 美 행정부 관계자는 흡연·비만 등으로 인한 기저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4. 24. 국내 방송사)

영향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김 위원장 사망’ 등의 가짜 동영상 유포 (4. 24.)



\*사진출처: 유튜브(Youtube) 화면캡처, 현재 관련 영상 모두 삭제됨.

‘20년 김정은 위원장 건강(신변) 이상설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건강 이상 추측에 일부 유투버 등이 가세해 가짜뉴스를 일파만파 확산

- 특히,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단정적 주장으로 가짜뉴스는 더욱 증폭

- 이로 인해, 안보불안 야기, 대북 정책 혼선, 한미정보공유 관계 등에 장애 초래



주체	해외 언론
구분	Negative - 건강 위중설 강화 및 확산

내용	<p>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 보도의 부정확성을 지적(4. 24.)한바 있으나, 로이터에서 '중국 의료전문가 등 대표단 파견'(4. 25.)을 보도하며 의혹 증폭</p> <p>- “나는 그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봄.” “그들(CNN)은 오래된 문서를 썼다고 들고 있음” (현지시간 4. 23.)</p> <p>-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의학원 소속 인민해방군 301병원 등 50여명의 의료진 등 급파”(4. 25. 로이터)</p> <p>이후, 아사히 등 일본 언론이 유사 내용의 보도를 전하는 등 뒷받침</p>
----	--



주체	해외 언론
구분	Positive - 코로나 19에 따른 피신 제기
내용	<p>미국 북한전문 분석매체 38노스에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김정은 전용 열차의 원산 정차 확인을 보도, ‘코로나19 피신설’ 부상 (4. 26.)</p> <p>앞서 4. 23. 경 일본 언론들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김 위원장 원산 이동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해당 보도의 신빙성을 제고</p> <p>- “김정은 위원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구가 많은 평양을 피해 원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4. 23. 일본 언론)</p> <p>- “김 위원장, 인구가 밀집한 평양을 피했다는 견해 존재” (4. 23. 일본 언론)</p>



주체	국내 정치권 및 해외언론
구분	Negative - 북한 내 특이동향 및 김정은 건강이상설 재확인
내용	<p>4. 26. 김OO 국회의원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 부인했지만, 4. 27. ~ 30.에는 태OO 당선인의 SNS 및 CNN · 동OOO 인터뷰, 지OO 당선인의 뉴OO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내 특이동향 감지 및 김정은 건강이상설 보도 재확인</p> <p>- “김정은, 제 발로 서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는 상태”(4. 28. 인터뷰)</p> <p>-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쪽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99% 확산. 이번 주말(5. 2.~3.)에 사망 발표될 것이며, 후계와 관련하여 김여정 쪽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5. 1. 인터뷰)</p>

(출처: 국내의 주요 언론 및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 종합·재정리)

## □ 정부 및 북한 대응

-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신변) 이상설’ 관련 다양한 논란에 대해 ‘특이한 내부 동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일관된 대응 지속
  - 4. 23. NCS상임위원회 개최 후 보도 자료를 통해 이를 분명히 하였으며, 통일부 장관의 국회 상임위 답변 및 對언론 인터뷰, 관련 포럼 발언 등에서도 동일 기조 유지
- 북한은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관영매체들을 통해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국정수행 시사
  - 국정수행 지속에 대한 표시로,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축전(4. 22.), 감사서신(4. 26. ~ 27.) 등이 전달되었음을 보도함.
  - ‘김일성 피격 사망설’(86. 11. 16.) 유포 당시 북한의 대응과 동일함.

## □ ‘김정은 건강(신변) 이상설’과 관련된 특징

-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등 특별행사 불참, 최고인민회의 연기, 돌연 정치국회의 개최 후 공개 활동 중지 등의 전후 사정이 의구심 야기
- 평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건강(신변) 이상설’을 뒷받침
  -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 급변사태까지 나타날 것” (4. 30. 인터뷰)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북한사정이 원활치 않다는 점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신변) 이상설’을 뒷받침
-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당국, NCS 등)에도 지속적으로 이상설 유포, 확대

- 과거에 비해 NCS, 통일부, 국방부 등이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건강(신변) 이상설’과 관련하여 여운을 남기듯 한 애매모호한 발언

4. 21.	“우리는 모른다.” “나는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4. 23.	“CNN은 오래된 문서를 썼다고 듣고 있다.” “(그 보도는)부정확한 허위 보도라고 본다.”
4. 27.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나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비교적 알고 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4. 28.	“나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4. 30.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만 당장은 이야기 할 수 없다.” “그저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란다.”
5. 1.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할 말이 있을 것” “아직은 김 위원장의 건강 등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다.”

○ CNN등 미국 유수 언론이 한국발 탈북자 및 특정 언론매체 기사를 추가적으로 확인·검증 없이 수용하여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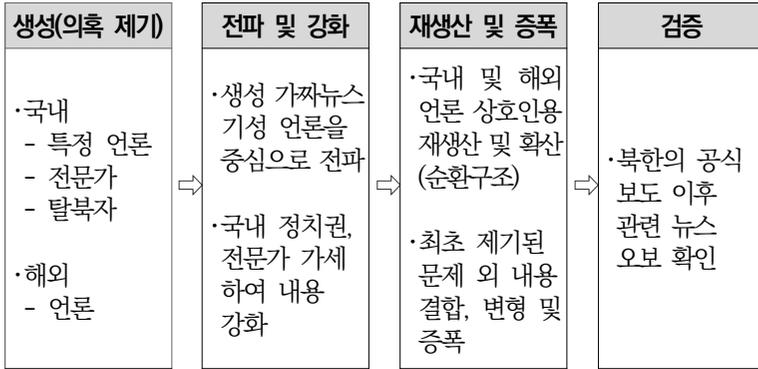
- “북한에 정통한 사람에 따르면 심혈관 수술을 한 것이 맞는 것 같다. 김 위원장 신변에 이상설이 제기된 만큼의 징후가 있는 건 사실” (4. 21. 인터뷰)

○ 조작된 동영상이 유튜브(Youtube), SNS 등을 통해 적극 유포되었으며, 이는 국내외에 파급 영향

- ‘김정은 유고 동영상’(4. 24.) 등의 유포로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수준으로 까지 가짜뉴스는 증폭, 이후 백두혈통과 세습논리를 건강 이상설에 결합시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함.

### 3. 대북 가짜뉴스의 패턴 및 특징

□ ‘생성 → 전파 및 강화 → 재생산 및 증폭 → 검증’ 4단계로 진행



□ 각 단계별 특징

- 생성 단계의 주체가 국내발인 경우 크게 특정 언론, 전문가, 탈북자로 나눌 수 있으며, 해외발인 경우는 주요 언론이 해당
- 생성된 대북 가짜뉴스 전파 통로는 국내의 기성언론이었으나,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SNS, 인터넷 매체, 개인방송 플랫폼 등으로 확대
- 전파 과정에서 정치권과 전문가, 탈북자 등이 가세하여 최초 가짜뉴스 내용을 강화, 추가하는 출처는 주로 ‘대북소식통’
- 해외에서 국내로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경우, 해외 유력 언론의 권위에 의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 소홀
  - 주요 외신이나 통신이 세계 주요지도자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향

## 4. 시사점과 과제

### ❖ 언론·정보 유통 측면

####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인포데믹’의 통제 불가능성

-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짜뉴스(오보)가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
  - △특정 언론, 유튜버 → △기성 언론·전문가·정치인·탈북자의 ‘대북소식통’ 인용 → △인터넷·SNS 확대 재생산(국내 및 해외 언론 상호인용)으로 유형화
-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전문 언론매체나 인터넷 사이트,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며 ‘인포데믹’ 상황으로까지 확대
  - 정치적 양극화와 편향된 정보 선택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이 가속화
    - \* 인포데믹: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pandemic)의 합성어로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 현상이 전염병과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용어

#### □ 북한 관련 내용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 소재로 악용

- 북한 내에서의 사건 발생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확인·검증이 필요함에도 ‘루머’ 생산 차원을 넘어 ‘확증편향’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전문가 윤리와 언론의 신뢰도 문제

- 엄격한 처벌규정 등 책임을 물을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언론윤리 강령」만으로는 부족한 수준
  - \*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언론윤리강령 제4조)
  
-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매우 중요함을 감안 할 때, 이에 상응한 책임도 져야하는 문제 대두
  - \* ‘20.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인 조사’ 중 보도문제 유형별 심각성 평가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가 매우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남북관계 측면

### □ 대북정책 추진에 전반적 장애 조성

-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추진해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신뢰도,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추진동력 약화
-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보다는 민감한 북한 정보를 부각시켜, 남북관계 불안정성 가중 및 증장기적 협력 기반 구축에 장애 유발

### □ 북한의 잠재적 반발 초래 가능성

- ‘급변사태’, ‘권한대행체제’ 등 언급은 남북 간 신뢰 구축 저해
- ‘원산 체류설’ 등 최고지도자 신변 관련 정보 노출은 북한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평가할 가능성
  - 가짜뉴스 대응 과정에서 한미 당국의 정보 역량 노출방지도 중요한 문제

## ❖ 대내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

- 북한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의 안보불안으로 작용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 초래
- 또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주식시장, 환율, 물가 등에 혼란 야기,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
  - 4. 21. ‘김정은 위원장 신변 이상설’로 △주가 하락(장중 한때 2.99%) △환율 상승 (9.2원) 유발

# 가짜뉴스 확산 현상에 대한 심리적 분석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1.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설

## □ 가짜뉴스 범람으로 안보불안, 경제적 혼란 초래

○ 2020년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궁전 참배 불참 원인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범람

- 건강이상설, 심혈관 시술설, 사실상 사망설, 뇌사상태설, 코로나 감염설, 섭정체제설, 김여정 집권설, 중국 의료전문가 파견설 등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 내지 사망설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범람함.

- 특히 탈북민 출신 태구민, 지성호 당선자는 김정은 거동불가설, 사망설, 섭정체제 등, 북한 내부의 정보통을 통해 99% 확산한다고 주장하며 혼란이 증폭됨.

○ 가짜뉴스 여파로 심각한 안보불안, 경제적 손실 초래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사망설 등의 가짜뉴스 여파로 국민들은 북한체제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게 됨.

-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안감 증가, 안보불안 증폭,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초래 뿐 아니라 주가 하락, 환율 상승 등 경제적 혼란까지 야기됨.

- 4.27 남북정상회담 2주기를 맞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 표명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의 기회를 제공함.

## □ 가짜뉴스의 속성과 확산 배경

○ 가짜뉴스는 특정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실이 아닌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 언론의 특성상 불가피한 착오에 기인한 오보나 루머(rumor)와 달리 가짜뉴스는 의도되고 조작된 거짓 정보를 의미함.
- 가짜뉴스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정규 언론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보의 소비자로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님.<sup>1)</sup>
- 가짜뉴스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 소비자의 인식과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실과 다른 정보의 의도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짜뉴스 문제는 2016년 이후 전세계적 폐해로 문제시되어 왔음.<sup>2)</sup>

- 2017년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로 ‘가짜뉴스(fake news)’를 선정하였으며, “언론 보도를 가장해 퍼지는 거짓되고 선정적인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정의함.
- 부정한 소문을 확산시키고 거짓정보를 확산하였다는 기록이 기원전 6세기에도 존재했던 것을 상기할 때, 허위사실의 유포와 거짓정보를 이용한 반대여론의 생성 전략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가짜뉴스 문제가 공공연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거론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질문을 받지 않는 행동이 보도되었기 때문임.

---

1) 황용석·정재관·정다운,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권 2호(2018), 101-123.

2) 조하진·김경호,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SNS 가짜뉴스(fake news) 네트워크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8호(2019), 1553-1565.

## 2. 가짜뉴스 주요 사례와 함의

### □ 외국 사례

#### ○ 미국의 사례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귀결된 2016년 미대선이 사실상 가짜뉴스로 인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성될 정도로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했음.
- 대표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정보의 확산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가 피자가게에서 아동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는데 가짜뉴스가 영향을 끼침.
-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의 '피자게이트' 의혹을 믿은 남성이 피자가게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 유럽의 사례

- 2017년 프랑스 대선 시기,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후보자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었음.
-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 시기, 72세의 고령이었던 당시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후보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었으나 45세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 2015년 그리스의 채무조정 협상시 독일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으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히틀러의 딸이라는 가짜뉴스를 그리스 전역에 확산시킴. 2013년 재선시기 때에도 메르켈 총리가 동독의 장교와 걷고 있는 사진이 유포되

며 동독의 공산주의자라는 가짜뉴스가 유포된 바 있었음.

## □ 국내 사례

### ○ 특정 인물 관련 가짜뉴스 사례

- 2014년 세월호 침몰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소요되었다는 가짜뉴스 등, 7시간 공백기 추정 관련 가짜뉴스 및 루머가 유포됨.
- 2017년 대선 시기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부친이 반공포로였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됨.
- 2020년 코로나19 관련 회의시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경례를 한 것으로 합성된 사진이 유포됨.

### ○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북한 관련 가짜뉴스

- 2018년 현정부 들어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민을 간 인원수가 3만 명이 넘는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됨.
-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사망자 전원의 의사자로 처리, 단원고 피해 유가족 대입특례전형,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조세감면 혜택 등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생성 및 유포되어 왔음.
- 그 밖에도 광화문 텐트 세월호 유가족 부적절한 행위설,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괴담,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부정, 5.18 민주화항쟁 북한군 침투설 등,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기 쉬운 주요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생성 및 유포됨.
- 모방송사가 실시한 '시청자가 뽑은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1위는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 폭등', 2위는 '태극기 사라진 정상회담', 4위는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

수', 6위는 '북한 헬기 용인에 기습 남하'로 집계되는 등, 당해 가짜뉴스 10개중 4개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나타남.

## □ 가짜뉴스를 활용한 사이버 심리전

### ○ 정치적 목적의 가짜뉴스

- 2016년 미국 대선 시기 유권자 한 명이 평균 최소 한 건, 최대 세 건 정도의 가짜뉴스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sup>3)</sup>
- 2017년 국내 19대 대선 시기, 국내 국민의 32.3%가 가짜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됨.<sup>4)</sup>
- 국내의 경우 대북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 역시, 외국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폄훼와 여론 분열 조장 목적과 무관하기 어려움.
-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가짜뉴스의 생성, 특정 후보자 흠집내기,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의 조장, 과거 사건에 대한 조작 등, 가짜뉴스의 주된 소재는 소위 진보 대 보수 진영간 정치적 입장의 분열과 첨예화로 귀결됨.

### ○ 가짜뉴스를 통한 심리전

- 가짜뉴스는 정보 소비자의 공분을 유발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심리전적인 성격을 지님.
- 심리전은 군사용어로서, 자국 외의 타국이나 타집단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 등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선전 및 기타

3)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11-236.

4) 오세욱·정세훈·박아란,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모든 활동의 계획적인 사용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수준의 가짜뉴스 생성은 현정권, 즉 세월호 침몰 당시 야당 세력에 대한 반대 여론 생성의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인물(들)에 대한 부당한 흠집 내기, 과거사건에 대한 조작 문제 등, 소위 진보 대 보수 진영 간 대립의 정치적 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갈등, 남남갈등으로 변질되어 사회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도덕성이 결여된 다분히 악의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폐해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남북관계 개선, 대북협력 사업에 전반적 장애를 초래함.
- 가짜뉴스의 당사자인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변이상설, 사망설 등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묵과하기 어려운 이슈이며 그에 따른 북한의 동요와 반발의 가능성 역시 무시하기 어려움.
- 특히 이번 태구민, 지성호 당선자의 발언 논란과 관련되어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 생성 또는 불신 증가의 가능성이 우려됨.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저지하거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짜뉴스로 인해 무엇이든 이득을 볼 수 있는 잠재세력은 소위 보수 진영과 관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3. 가짜뉴스의 규정과 행위자 구분

#### □ 가짜뉴스의 규정

- 가짜뉴스는 오인정보, 패러디, 풍자적 페이크뉴스, 루머를 제외한 허위정보와 거짓정보로 한정
  - 가짜뉴스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규제할 경우, 이는 언론 기구에 대한 국가적 통제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허위의 사실임이 인식된 정보나, 보편적 기준에서 언론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사실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뉴스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공개할 때 가짜뉴스로 규정함.
  - 최근 태구민, 지성호 당선자의 불충분한 근거에 기반을 둔 발언과 같이, 사실에 대한 검증이 부재한 채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로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며 언론에 대한 신뢰의 추락,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야기됨.

#### □ 가짜뉴스의 확산 배경

-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정보의 소비와 공유, 확산을 촉진
  - 인터넷 보급 및 확산은 정보의 전달과 집결, 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 2011년 아랍의 봄, 재스민 혁명 등, 빠른 공론화와 정치적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 변혁을 일으켰던 사건 역시 인터넷 보급 및 확산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음.

- 정보의 손쉬운 취득과 수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무선통신망 환경에는 사회 변혁을 견인하는 순기능과 동시에 사회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가중시키는 위험성이 존재함.
- 가짜뉴스의 확산 역시 물리적 기반인 인터넷의 활용과 뉴미디어의 보급으로 용이해짐. 인터넷, SNS의 활성화로 인해 가짜뉴스의 보급이 수월해졌으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사회적 병폐로 인식되고 있음.

#### ○ 경제적 이득 창출이 가능한 뉴미디어의 등장

- 무제한요금제의 증가, 통신요금 인하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한 새로운 정보의 접근에 연령과 지역의 경계가 사라짐.
- 최근 뉴미디어 매체로서 각광받기 시작한 유튜브의 경우,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광고수익과 직결되어 보다 선정적인 제목 및 내용의 자료들이 범람함.
- 팟캐스트, 유튜브 등의 매체가 대안언론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치, 사회, 예술, 오락 등 광범위한 자료들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된 기능은 정보의 제공이나 동시에 경제적 이득 창출의 목적성을 지님.

### □ 가짜뉴스의 행위자 구분

#### ○ 가짜뉴스의 생성과 소비과정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

- 주류 언론의 방송국, 신문사 등의 기자, 리포터, 구독자, 시청자 뿐 아니라 대안언론을 활용하고 제작하는 개인들로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범위가 확장됨.
- SNS, 블로그, 페이스북 등 언론 뿐 아니라 정보의 생성과 소비의

주체의 범위가 인터넷 환경으로 확장됨에 따라 행위자 구분을 가짜뉴스에 국한하여 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짜뉴스의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분석의 필요성

- 가짜뉴스의 특성상,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 ‘누가 가짜뉴스를 만들었는가’의 의미는 약화되고 관계망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가 뉴스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용자와 확산자와 생산자의 기능이 중첩됨.
- 연구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짐. 헬리 솔버그 팩티스크 의장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독해능력)로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함.<sup>5)</sup>
-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광의의 개념, 장기간의 개입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요인 외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을 통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령, 교육수준, 종교적 특성 등 가짜뉴스의 생산과 전파, 확산과 그것의 이용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가짜뉴스 행위자의 심리적 분석

### □ 가짜뉴스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

○ 동기화 추론과 확증 편향에 따라 강화되는 신념

---

5) 정철운 (2018.06.30). “가짜뉴스 앞에 부서진 ‘뉴스’를 건져 올리다”.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14>.

-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에 따라 일반 대중이 접하는 편향된 정보에 대한 확증편향과 선택적 노출 경향이 가짜뉴스의 확산에 영향을 끼침.
- 동기화 추론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려는 심리적 기제라 할 수 있음. 방향성 동기와 정확성 동기로 구분되는데, 방향성 동기화 추론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이며 정확성 동기는 보다 정확한 사실을 구축하려는 심리적 기제로서 작용함.
- 사람들은 진실 여부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적 허위지각’은 ‘강한 확신’을 통해 형성되고 스스로는 충분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오인함.
- 정치적 허위지각에 이은 확증편향은 새로 접하는 정보의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접한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를 신뢰하며, 상반되는 정보는 쉽게 기각하는 경향성을 의미함.<sup>6)</sup>
- 진실 여부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므로, 정치적 견해와 그에 따른 신념 행동 역시 더욱 강력하게 발현됨.

#### ○ 가짜뉴스에 대한 진실 착각효과

-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럴 듯한 정보를 접하는 빈도가 증가할수록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언론 매체를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은 정보 소비자의 신념을 강화시킴.<sup>7)</sup>

6) 노성중·최지향·민영, “가짜뉴스효과의 조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권 4호 (2017), 99-149.

7) Pennycook, G., & Rand, D. G. (2017). Who falls for fake news? The roles of analytic thinking, motivated reasoning, political ideology, and bullshit

- 동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증가할수록 친밀도가 증가하며,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숙도 역시 증가하므로 발생하는 진실착각효과로 인해 정보의 소비자가 이후 그것과 상반되는 새로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인식이 변하기 어려우며, 가짜뉴스의 효과가 공고하게 지속됨.

○ 청소년 및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가짜뉴스에 취약

- 동기화 추론과 확증편향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강한 자기 견해를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가짜뉴스를 통해 자기 견해를 정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sup>8)</sup>
- 신념 및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 시기나, 정치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 사회적 약자일수록 가짜뉴스의 폐해가 보다 심각함.
- 특히 정보 접근 및 검색에 능숙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인한 필터 버블(filter bubble)로 인해 특정 정보, 기 접촉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확증 편향이 강화되기 쉬움.

## □ 가짜뉴스 확산자의 심리적 특성

○ 언론 종사자들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저하에 따른 문제

- 언론 매체에서 기자들이 제한된 합리성의 오류에 갇혀, 만족스러운 기준에서 정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

receptivity. Retrieved from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023545](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023545).

8) 안도현, “디지털 가짜뉴스에 대한 청소년의 확증 편향 연구: 경북지역 고등학교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권 1호(2020), 77-105.

적당히 만족하는 수준에서 행동에 옮길 때, 즉 가짜뉴스 생산자로 의심받거나 지각하지 못하는 와중에 가짜뉴스가 생산 및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sup>9)</sup>

- 특히 인터넷 매체의 종사자들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저하로 인해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기도 함.

○ 친사회적 동기가 가짜뉴스 확산에 기여

- 가짜뉴스의 이용자가 곧 확산자로서 기여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친화성과 성실성을 들 수 있음. 즉 타인에게 협력적이고 공감을 잘 하는 성향과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향이 높은 편일수록 자신이 접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도움을 주려는 이타적 속성을 지님.<sup>10)</sup>

-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위한 정보의 공유가 가짜뉴스 확산의 온상이 되는 현상이 이와 관련됨. 가짜뉴스 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접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타인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가짜뉴스 확산이 가속화됨.

○ 이타성과 자기고양 동기가 가짜뉴스의 확산에 기여

- 기성 언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언론에서의 가짜뉴스의 전달자는 이용자와 구분이 어려움.

-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목적을 세 가지, 즉 첫째는 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행동이

---

9) 이완수, “기자=합리적 행위자? 엄중하게 묻는 계기,” 『관훈저널』, 61권 4호(2019), 43-52.

10) 민영·최지향·노성중, “‘가짜뉴스효과’의 조건,”(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189-193.

며 둘째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 마지막은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Cialdini & Trost, 1998).

-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하는 동기는 관계형성의 욕구와 자기고양 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sup>11)</sup>
- 즉, 일반 대중이 가짜뉴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확산시킬 때의 심리적 기제는 친사회적 행동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음. 가짜뉴스의 이용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이득이 되거나 유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게 됨.
- 보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정보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될수록 해당 정보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Weenig, Groenenboom, & Wilke, 2001)<sup>12)</sup> 내집단 내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의 일부 원인을 설명함.
- 친사회적 욕구와 자기고양 동기는 일반 시민이 가짜뉴스의 소비자임과 동시에 확산자가 되는 주요한 심리적 기제라 할 수 있음. 자기고양 동기는 이타적 속성이 아닌, 자신이 돋보이거나 긍정적 가치감을 느끼기 위한 행동이므로, 내집단 내에서 공감받기 어려운 정보일지라도 보다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하려는 태도가 강화되기 쉬움.
-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이자 내집단 응집력이 강한 집단인 북한이탈주민 내집단 내에서 강하게 발

11) 차유리, "신(新)'카더라통신'의 동기적 요인 효과,"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2015), 157-195.

12) Weenig, M. W., Groenenboom, A. C., & Wilke, H. A., "Bad news transmission as a function of the definitiveness of consequenc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or and recip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0(3), 2001, 449-461.

현될 가능성이 높겠음.

- 즉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타적 동기와 더불어 소속 집단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긍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자기고양 동기가 동반 작용하는 것은 가짜뉴스의 확산에 상승적 영향을 끼침.

## □ 가짜뉴스 생산자의 심리적 특성

### ○ 가짜뉴스 생산자의 적개심과 혐오 감정

-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가짜뉴스 생성의 심리적 배경에는 타집단에 대한 혐오감정이 내재됨.
-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지니는 정동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의 분열, 외집단이 내집단을 침해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적개심이 혼란스럽게 자리잡고 있으며 가짜뉴스의 대상이 되는 '소재'와 그와 관련되어 피해를 받게 되는 타집단에 대한 죄책감이나 연민, 양심의 가책은 소거되기에 이룸.

### ○ 가짜뉴스 생산자의 기만과 자기기만

- 한나 아렌트는 저서 '공화국의 위기'에서 펜타곤 문서가 드러낸 정치에서의 거짓말 문제를 '기만'이라고 지목함.
- 정책 결정자를 포함한 고위직의 행태에 거짓말하는 경향이 심각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공공연한 거짓말이 사용되어왔다고 분석함. 거짓 정보의 생산과 확산 과정에서 행위자의 '거짓말하는 능력', 즉 타인에 대한 기만과 자기기만이 동시에 관여함.

- 타인에 대한 기만은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타인을 속이고 착취하려는 자기중심적 의도로서 거짓 행위가 발현될 때를 말하며, 자기기만은 스스로 사실이 아님을 인식할 때 발동되는 도덕성, 즉 양심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동되는 것임.
- 자신의 도덕성과 양심으로 유발되는 죄책감과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의 합목적성 즉 공공성, 이타성을 지닌 행위라고 합리화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기만함.
- 가짜뉴스는 그 구성요소로서 공공에 대한 정보제공의 원천인 뉴스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가짜뉴스 생산자의 경우 타인에 대한 기만의 의도가 보다 잘 가리어지며, 스스로의 양심 문제 역시 공적인 형태를 갖춘 정보를 다루는 행위를 통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음.

○ 가짜뉴스 생산자의 사이버 심리전 참전

- 과거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국면에서 정규재 TV의 박근혜 대통령 단독 인터뷰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 심리전을 촉발시킴.<sup>13)</sup>
- 내집단의 이익을 위한 외집단의 배척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은 외부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 감정을 촉발시켰으며, 타인에 대한 기만과 자기기만을 은폐시키며 자신의 행위를 쉽게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임.
- 태구민, 지성호 당선자의 행동에서 나타나듯, 사실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정보와 주관적 추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높

13) 정철운, “가짜뉴스 유튜브 극우보수와 저널리즘,” 『인물과사상』, 247호(2018), 168-183.

은 허위 정보를 강하게 주장하는 행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앞장선다는 사명감에 기반을 둔.

- 가짜뉴스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후회나 죄책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내집단에 대한 강한 사명감이 개인적 감정을 초월하기 때문이며, 이는 전쟁터의 군인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심리적 기제와 유사함.

○ 사명감과 경제적 이득의 상승작용으로 인한 가짜뉴스의 확산

- 알릴레오, 홍카콜라, 가로세로연구소 등과 같은 대안 언론에의 공인 참여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매체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증가함.
- 정보 생산의 주체는 정보 생성 및 전파를 통해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사명감을 구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정보 확산 증가에 따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보다 강력한 내적 동기로서 진화됨.
- 일부 가짜뉴스 생산 및 보급자의 경우 사명감보다는 실익을 우선시하며, 이 경우 정보의 확산을 위해 보다 선정적인 내용의 정보를 처리하는 도덕적 해이 상태로 나타남.

## 5. 총평

-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사망설 등,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현상은 안보불안,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등,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침.

- 특히 정부의 일관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당선자들 허위 정보, 사실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등, 가짜뉴스 범람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잡음.
- 가짜뉴스의 생산 및 보급, 확산 문제는 이미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척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인류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심리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이동통신기술 및 무선통신망의 발전으로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 및 공유가 용이해지고, 대안 언론 매체, 뉴미디어 매체가 부상함에 따라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필요에 따라 여론이 수렴되고 집단 행동으로 표출되는 등, 정치적 견해의 소통과 실천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순기능과 더불어, 가짜뉴스의 생성과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분열, 정치적 대립 또한 빈번히 발생하게 됨.
-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자는 내집단의 이익과 외집단의 배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심리전에 참전한 심리적 특성을 공유함. 즉 거짓 정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생성하고 보급하는 데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그에 앞서는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뚜렷함.
- 대안 언론 매체의 경제적 이득 창출 플랫폼이 심리전적 행위와 결합되어 가짜뉴스 생산자의 동기가 강화되었으며, 허위 정보의 생성과 확산이 가속화됨.

- 정보를 이용하는 대중의 동기화 추론과 확증 편향, 친사회적 행동을 통한 소속감의 동기와 내집단 내에서의 자기고양 동기의 상승 작용으로 인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짓된 정보일지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용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영향을 끼침. 이는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경우 가짜뉴스에 보다 취약해지기 쉬우며, 가짜뉴스를 통한 거짓된 신념의 주입과 강화, 정보의 확산을 통한 부적절한 여론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요인이기도 함.
  
- 양극화된 정치적 정보를 통합하고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정보 독해 능력을 위한 교육적 정책이 필요함. 또한 가짜뉴스의 생산 동기인 경제적 목적의 단절할 수 있는 강한 제재와 관련된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 1.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의미

- 최근 김정은 사망관련 보도가 국내외 언론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는데,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유포와 이에 따른 혼란 야기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1986년 조선일보의 김일성 피격 사망설 보도
  - 2013년 조선일보 현송월 총살설
  - 2015년 CNN 김경희 독살설
  - 2016년 정부 리영길 처형설
  - 2019년 조선일보 김영철·김혁철 숙청설 등
  
- 북한 관련 허위정보는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일종의 ‘인포데믹(infodemic)’ 현상이 되면서 남북관계 뿐 아니라 남한 사회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음.
  - CNN의 ‘김정은 위중’ 보도 당일 주가가 한때 2.99%포인트나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9.2원 급등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
  
-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발생과 유통이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허위정보의 내용과 발생배경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은 각 허위정보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대응이 가능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허위 정보의 대상과 내용
  - 허위 정보 생산의 배경

- 허위 정보 생산과 유통의 주체
- 허위 정보 생산 유통의 과정
- 허위 정보의 대내적 영향

## 2. 북한 관련 허위정보 발생의 대내적 조건

### □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권의 수립 등 국내정치적 지형의 변화

- 남한 사회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북한 정보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반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발언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은 북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대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 관련 정보가 허용되는 폭 자체가 확대되었음.
  - 민주화 이전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북한 관련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면서 권력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
  - 민주화 이후 정부의 북한 정부에 대한 점진적인 개방의 폭 확대
  - 국가보안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북한 정보를 개인 및 민간이 자유롭게 획득하거나 정보 획득을 위한 북한주민과의 임의적 접촉 자체가 처벌의 대상
- 민주화 운동 시기에 ‘북한바로알기운동’은 핵심 사항이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 관련 정보가 시민사회에 대거 유입되었고,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결과로서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새로운 북한 정보 획득 통로가 마련되었음.
  -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던 시민사회는 국가가 제공하는 북한 정

보와 다른 정보 획득하기 위한 통로 확보 노력 지속

-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의 왕래가 잦은 조선족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고 중국과의 교류확대로 북한 정보가 대거 유입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다양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인도적 지원사업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음.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포함
- 인도적 지원사업 담당자는 수십차례 방북하는 사례도 존재
- 국가와 독립된 북한 전문가 집단이 구축되는 결과

○ 진보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보수언론 및 조직화된 보수적인 시민사회가 국가와 대립하면서 보수적인 대북정보를 독자적으로 수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음.

- 보수적 정부의 대북정책 지속을 지향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북한 정보체계 구축 노력
- 기존 보수적 대북정책을 담당하였던 일부 정부구성원과의 협조 지향

#### □ 범지구화(globalization) 및 정보화의 가속화 등 사회적 지형 변화

○ 범지구화 경향으로 초국가적 이주가 활성화되면서 외부 정보의 유입이 활성화되었고,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정보도 다수 포함되었음.

- 중국·러시아 등 북한과의 접촉 및 왕래가 많은 국가들과의 교류

가 활성화되면서 조선족·고려인 등의 국내 입국 확대

- 북한과의 교류가 많은 중국·러시아의 접경지역이나 북한이 진출이 활발한 동남아 등 해외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 및 개인이 증가

○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 유통이 일상화되면서 제한되었던 북한 관련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음.

-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공식적인 제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 존재
- 인터넷과 각종 SNS의 확대로 다양한 유통 수단의 확대

○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 관광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함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

- 관광객 이외에도 북한에 공관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의 주재원 및 북한과의 사업을 운영하는 조선족 포함 외국인
- 북한이 관광객에 대한 통제도 완화하면서 관광객들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튜브에 다수 업로드

○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면서 국내 정착 이탈주민들도 동시에 늘어났고, 이들이 북한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가 연간 1,000명을 상회
- 국내 입국 탈북자들은 북한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등 네트워크를 유지
- 보수적인 정치집단은 이탈주민을 북한 및 진보적 대북정책을 비

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과도하게 부각

- 종합편성방송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일부 언론에서 탈북자를 기자로 채용하면서 탈북자들이 북한 정보 전달자로 공인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금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클럽’ 등
  - 3만 명이 넘게 된 탈북자들은 조직화 집단화되면서 독자적인 정치사회적 발언을 시작
  - 보수 종편이나 언론은 정치적 목적과 동시에 선정적인 북한 보도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도 확보하려는 경향
  - 탈북자들을 다수 채용한 ‘데일리NK’의 등장
  
- 정보화의 진전으로 개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수적인 유튜브 채널 등도 급증하였고, 정치사회적 관심 유도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적인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보수적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등에서 진보적 유튜브 압도
  - 구독자 상위의 보수 유튜브 채널일수록 콘텐츠 업로드에 적극적
  
- 북미회담 성사 등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타블로이드 외신 등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자극적인 북한 기사를 확인 없이 작성하는 경향이 생김.
  - 영국 등지의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북한 코너 신설

### 3. 북한 관련 허위 정보의 특징

#### □ 북한 관련 허위 정보의 내용

- 북한 관련 허위 정보는 최고지도자 및 중요 정치 엘리트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고로 인한 권력상실이나 처형 등 부정적인 차원의 신상정보가 중심이 되고 있음.
  - 김일성에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궤위상태에 주목
  - 김영철 등의 정치지도자의 실각설
  
- 최고지도자 및 엘리트의 실각 뿐 아니라 정치구조에서 일반 주민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허위 정보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인육도 먹을 정도의 처참한 북한 주민의 삶이나 핵무기 실험지 인근 주민의 방사능 피폭 등
  - 북한체제의 폭력성 및 주민의 저항운동 등
  
-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내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강조점은 최근에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과거에는 최고지도자 및 중요 정치엘리트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상태 여부(궤위 혹은 숙청 등)가 허위정보의 중심
  - 최근에는 북한 체제 붕괴론을 전제하면서 문제점 비판에 초점
  - 진보정부의 평화 및 화해협력 기반의 대북정책 비판과 연계

○ 19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형성된 주사파 중심의 북한 관련 정보는 신념에 기반을 둔 허위 정보인 경우가 많았던 반면 최근 북한 관련 정보는 정부 비판이나 북한체제 비판을 위한 목적론적 허위 정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목적론적인 북한 관련 허위정보는 의도적 왜곡의 경우도 가능

○ 최근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현 정부를 포함한 진보적 정부의 평화지향적인 대북정책의 정당성 훼손

- 북한체제의 붕괴를 지향

- 북한의 비정상적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

- 허위정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 획득

## □ 북한 관련 허위정보 유통과정

○ 과거 정부가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수언론이나 보수적 시민단체 및 개인이 허위정보 유통의 주체가 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리영길 처형설 보도자료 배포의 경우

- 북한 관련 오보가 가장 빈번한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는 조선일보

- 최근 김정은 사망설과 관련된 외신매체들과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들은 여전히 김정은 중병설이나 사진조작설을 주장

- 최근 북한 관련 허위정보는 탈북자들의 미확인 ‘소식통’을 기반으로 하거나 중국 등 제3국의 취재원을 기반으로 작성된 경향이 있으나 소식통이나 취재원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위층이나 엘리트 집단이 폐쇄적인 까닭에 정보 유출이 어려움.
  -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가공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빈번
  - 일부 종편의 경우 탈북한지 30년이 넘는 탈북자나 유아시절 탈북한 사람이 최근 북한현실을 증언
  - 소위 북한 관련 해외 전문가 다수가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부족
  
- 최근 북한 관련 허위정보는 국내 탈북자단체 혹은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 국내 유튜브나 뉴미디어 언론 소개 → 해외 언론 소개 → 국내 레거시 미디어 소개 → 정치권의 증폭의 순서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로를 밟고 있음.
  - 외국 언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사대적 언론관의 부분적 영향
  
- 정파적 이해와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 결합함으로써 허위정보가 생산과 유통이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음.
  - 보수정당과 레거시 미디어 언론 및 뉴미디어 언론의 결합 양상

## 4. 북한 관련 허위 정보의 대내적 효과

### □ 남남갈등의 확산

- 200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과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본격화되었는데, 남남갈등은 북한 관련 사안들이 발생할 때 마다 격화되는 경향이 있음.
  - 200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대적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평화적 공존의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수적 집단의 비판이 ‘남남갈등’으로 표출
  - 국가 주도 대북정책의 균열과 ‘남남갈등’은 밀접하게 연결
  - ‘남남갈등’을 국론분열로 연결시키면서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으며 보수언론에서 200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념
  - 정상회담이나 협력사업 등 화해협력의 대북정책 입안 및 시행할 때나 북한의 핵실험 등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마다 남남갈등이 강조되어 온 경향
  
- ‘남남갈등’을 유화적 대북정책과 무능한 정부의 통합정책으로 연결시켜온 보수야당과 언론 등은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생산 유통하면서 남남갈등을 자극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음.
  - 반면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비판하는 집단과 사람들은 이를 언론구조의 문제와 동일시하면서 북한 관련 남남갈등에서 전방위적인 남남갈등으로 확대되는 계기

## □ 한국사회의 불안정 심화

- 분단체제하에서 한국사회는 근본적으로 북한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체제 특히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의 존속이 핵심인 바, 북한최고위층의 유고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와 관련된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자극할 수 있음.
  - 북한의 불안정은 남한의 불안정으로 연계
  
-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은 직접적으로 해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 제고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음.
  - 최고지도자 유고설이 제기될 때마다 한국 증시 하락 경험 참고
  
- 북한 관련 허위정보는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 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 수행 추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남북한의 특수관계에서 정보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을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지향

## □ 북한 및 탈북자에 대한 희화화와 왜곡된 인식 심화

- 북한에 대한 적대감 및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북한 관련 허위정보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반복의식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폐쇄적이고 정보유통이 제한적인 북한의 상태를 지나치게 강조
  - 정책과 같은 공식적인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신체 상태 등의 비본질적이고 사적인 문제들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북한 정치지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확대
  - 북한의 경제난, 핵실험 등으로 반공, 반북을 넘어 '혐북'의 분위기가 심화되는 경향을 가속화
- 북한과 관련된 '해프닝'이나 이벤트적인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북한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어렵게 만들게 함.
- 북한체제 문제를 최고지도자의 거취와 동일시하면서 중요한 정치지도자를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동정과 같은 호기심 대상 수준으로 격하
  - 사망 혹은 와병설 여부에서 비롯된 허위정보 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외모 등에 대한 희화화로 변화
  - 북한 관련 현안문제의 합리적 해결 뿐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 및 통합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
- 최근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전달자 혹은 생산자로 탈북자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허위정보임이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해 있는 탈북자 전체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음.
- 탈북자 관련 시설을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탈북자들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한 현실
  - 탈북자 개인과 전체 집단을 구별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탈북자의 개인적인 차원의 허위정보 관련 행위는 탈북자 전체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연결

- 국회의원 신분과 같은 공직을 갖고 있는 탈북자는 대표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문제적 행동의 부정적 결과는 배가되는 경향
- 김정은 사망성과 관련된 태영호·지성호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빨갱이’ 담론이나 스파이 담론은 정파나 이념적 지향에 상관없이 탈북자 집단을 보는 남한의 왜곡된 시각을 증폭

## 5. 북한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 □ 북한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확대

-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체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시작된 북한 관련 허위정보 생산 및 유통 경험 존재
- 실질적인 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관련 정보를 정부가 국가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허위정보가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분명하게 부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음.
  - 정보획득 과정의 노출
  - 국가간의 신뢰문제 야기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통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획득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없

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도 북한 관련 허위정보 생산 및 확산의 토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 관련 정보에서 정부와 민간이 양자적 대립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북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민간 부분과 더불어 정보의 진위여부나 해석여부가 논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도 정보제공자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정보 판단이나 해석 과정에서도 하나의 부분으로 참여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통제 등 구태적인 정보통제 방식 개혁
  - 북한 언론 및 도서 등의 일반 공개 확대
  - 북한 정보의 차별적 향유의 근본적 개선
  
- 북한 정보 통제를 넘어서서 북한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푸쉬서비스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시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나 국정원 등의 언론 서비스에 대한 성찰과 개선 방안 모색
  - 현안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처가 아니라 선제적 설명 등 지향
  - 정부가 정책집행과 관련된 정파성이 문제가 된다면 통일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기관이나 국회의 입법조사처 등 중립적 기관 활용 고려

-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중요한 고리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국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허위정보 생산하고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야당에 별도의 허위정보 교정 기회 마련

#### □ 북한 관련 정보의 사회적 선순환 구조 구축

- 국가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 언론관련 단체의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언론관련 시민단체 중심의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사례 수집 및 발표
  - 기자협회 및 언론사 노조 등의 자정 노력 지향
  - 북한 및 언론 학회 등에서 북한 관련 허위 정부에 대한 연구 진행
-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제소하고 시정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함.
  - 당사자가 부재한 까닭으로 현재 북한 관련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 모색
- 언론기관에서는 북한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북한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북한전문기자 양성 및 주기적 재교육
  - 북한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

#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안보적 영향과 대응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1.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안보적 관점

## □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집단극화

- 일반적으로 가짜뉴스가 생성·확산되는 주요 원인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과 SNS 등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요인을 지목
  - 가짜뉴스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
  - 기술의 발전은 산업은 물론이고 정보 역시 중앙 집중적 구조에서 분산 수평 개방형 구조로 변화시켜 거대한 정보력보다 미시 정보력의 주도적 역할 가능
  - 인간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오래 살고 도시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력 간 이익에 입각한 도전과 위협은 더 큰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빠른 새로운 사회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반 정부세력, 해커, 대중적 여론, 영향력 있는 개인, 극단주의자 등이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자신들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유형과 내용의 가짜뉴스가 나타날 것임
  
- 그러나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진영논리에 갇힌 집단극화 현상이 가까움
  -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므로 더 극단화되는 ‘집단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사람들은 가짜뉴스인지 알면서도 SNS가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듣고 싶은 정보만 돌려 보는 행동을 강화하는 이른바 ‘확

### 증편향' 표출

- \* “대중은 큰 거짓말일수록 더 잘 믿는다. 그리고 거듭하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괴벨스, Paul Joseph Goebbels)
- 북한 관련 정보는 확실할수록 오히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부인과 확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제한
- 북한 관련 뉴스는 이념에 기반 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의견이 비슷한 뉴스를 소비하려는 경향이 강해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움

## □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주체와 의도에 의한 확장성과 지속성

- 북한 관련 ‘가짜 뉴스’는 단순히 관점의 차이나 정보의 부재 때문이 아님
  - 최근 나타난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정·첩보를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다름이나 맞고 틀림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북한 정보의 희소성이나 신뢰성 있는 자료의 부족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생성 확산의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음
  -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지속 제기하며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불투명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돌리며 반성 없는 논점 흐리기와 ‘김정은 손목 흉터 시술 흔적 가능성’ 등 가짜뉴스 재생산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생성 전파하는 주체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내외 집단이나 그 이상의 이해국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개인적 일탈이나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 확산된 것일 가능성이 높음
- 이번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의 최초 발화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에 대한 의혹을 국내외 언론이 재기하고 탈북자와 정치가, 전문가들이 가세 하면서 확대 재생산됨
-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언론 및 전문가, 정부차원에서까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남북문제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됨

#### □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재발생 가능성과 안보문제화

- 김정은 건강은 한반도 문제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반복 가능성
  - 김정은 신변이상설의 생산과 확산이 최근 코로나 사태, 총선 결과, 그리고 미국의 대선 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
- 결국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여타 가짜뉴스와는 달리 기술발전에만 따른 환경적 문제를 넘어 분명한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대내외 주체들에 의해 생성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
  -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분명한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생성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보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

## 2.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 조성

### □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통일방안과 대북정책에 위배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남

- 일부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함께 ‘김여정의 권한대행’, ‘급변사태’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 제기

- 남북기본합의서의 근간인 상호 체제 인정 및 불가침 원칙과 충돌, 남북 간 신뢰 구축에 위배

\*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4조 :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언론자유가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

\*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현 정부의 평화변영의 대북 정책에도 위배

-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단계적·점진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음

- 평화공존과 공동변영을 비전으로 ‘정권교체 불추구’를 천명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충돌하고 ‘3-No(북한 붕괴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 원칙’ 손상 우려

\*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연설(2019.9.24.) “전쟁불용, 상호안  
전보장, 공동번영”

## □ 북한의 반발 초래와 역이용 가능성

- 김정은 신변이상설과 이에 따른 후계체제 논의, 급변사태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북한의 잠재적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 경색 가  
능성
  - 북한 내부 특히 최고 존엄의 신변 및 동선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라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음.
  - 특히 지난 ‘원산 체류설’ 등은 우리의 정보자산을 노출 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주의해야할 대목임.
  
- 북한발 가짜뉴스나 역공작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의 생성 유통은 오히려 북한발  
가짜뉴스로 역이용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함.
  - 이번 탈북자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성호 당선인의 경우 ‘김정은  
사망 99%’라고 한 것이 단순히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북측의 정  
보에 의한 것이었다면 역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한 확인도  
필요할 것임.

## □ 남북관계 확대 및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 조성

- 우리사회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되면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부정적 요인이나 협상 시에도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확대해 나가려는 상황에서 북한의 불만

과 남측에 대한 불신으로 추진력 약화

- 향후 남북이 교류협력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의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문제 삼을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이나 양보가 불가피할 수 있음.

-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안보불안과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어렵게 함.
  -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중요성보다는 북한 관련 정보의 민감성만 부각, 남북관계에 불안정성 가중 및 협력 기반 구축에 장애 유발
  - \* 4.27 2주년 계기 남북관계 적극적 의지표명에 대해 국회,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 상황을 이유로 비판적 입장 제기
  -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에 대한 편향된 정보유통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안보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3. 불필요한 안보 비용 초래 및 국가 신뢰도 하락

#### □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시민들의 안보 불안감 확산

- 북한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감으로 작용하여 판문점/평양선언 이후 만들어 놓은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삶에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
  - 2017년 말까지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급속히 완화되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간 대화국면 전

환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 속에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고 일상  
에 평화를 선물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시민들에게 다시금 전쟁의 공포와 위협을  
재생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재기, 주식시장, 환율, 물가 등  
에 혼돈을 야기할 가능성

○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의 해소는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  
를 넘어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과정

-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서 공고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  
은 아님.
- 남북간 긴장과 갈등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제도적으로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선행되어  
야 할 문제임.

#### □ 우리 군의 경비태세 및 군사적 위기대응 차원에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 초래

○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안보피로감 및 안보불감증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의 장기간 대응태세 유지시 안보피로감  
누적 등으로 오히려 안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 북한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감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간 상황 지속에 따른 시민들의 무감각으로 안보불감증을 초래

○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장애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동  
력의 기회 상실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남북긴장 고조와 한반도 평화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분단비용을 소모

- 그동안 남북 군비경쟁 등 대결은 값비싼 비용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의 근본적 해소는 남북 긴장 완화에 따른 분단 비용 절감 효과와도 연결 가능

○ 북한의 오판을 자극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으로 하여금 실제 충돌의 위험이 아무런 책임질 일 없이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고 긴장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음.

#### □ 코리아 리스크 심화와 대외 국가신뢰도 하락에 따른 외교정책 추진에도 부담

○ 우리 내부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문제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이해 및 정보능력은 물론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

○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주변 이해국가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 제공

- 특히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두고 대외정보기관이나 언론을 더 신뢰한다거나 하는 내부적 정쟁화는 외세의 간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4.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안보적 대응

#### □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정치화 및 안보문제화 억제를 위한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의 협력적 노력 필요

-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정쟁화는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치권의 인식 필요
  - ‘국가이익’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안보최우선 공감대 확충
  - 가짜뉴스와 연관된 안보 포퓰리즘은 안보위기 증폭 요인이라는 인식 요구
  
-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안보국방 관련 전략커뮤니케이션(SC) 활성화와 DIME(외교, 정보, 군사, 경제) 요소 체계적 통합관리
  - 안보/국방이슈가 가짜뉴스로 인해 정파 이슈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적 어젠다로 관리
  - 북한 관련 발생 가능한 주योग짜뉴스에 대해 안보국방 관련 쟁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논란이 되는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초기 제압

#### □ 국민들의 객관적이고 양질의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 북한 정보에 대해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 모색
  - ‘북한의 방송은 물론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 및 접근을 허용
  
-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협업 노력
  - 북한전문가, 학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협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양질의 북한 정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
  - 사실(Facts)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북한 관련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면역체계 강화

○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 확산시키는 정보생태계는 규제 강화만이 해결책이 아님.

- 국민 모두 가짜뉴스를 식별해내는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우선
- 가짜뉴스가 넘볼 수 없는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

**□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열린 협력 마련**

○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 언론에 의해 최초 생산되고 이를 한국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거나 개인이 확산 되는 경우가 빈번함.

- 이는 외국 언론이나 외국전문가들의 북한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중요

V

# 북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언론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자세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1. 문제 제기

- 건강이상설에 사망설까지 나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공개활동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북한 관련 허위 정보 확산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 이는 북한 관련 언론 보도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오래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임.
  - 언론이 지켜야 할 객관적 사실 보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태도를 보이는 것은 뿌리 깊은 그릇된 관행임.
  - 언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사망설, 건강이상설 등의 각종 억측이 가짜뉴스로 유포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일부 언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검증없이 무책임하게 보도, 즉 허위정보를 감염병처럼 확산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
  - 언론과 함께 북한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일부 정치인, 학자, 탈북자 등을 포함한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 관련 허위 정보의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임.
  
- 추락한 북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검열, 특별한 성찰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 즉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 생산-확산-증폭 과정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다시 받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언론과 전문가 사이의

각성과 약속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짜뉴스의 재생산과 이에 따른 국가적 혼란의 반복은 피하기 어려울 것임.

- 본 보고서는 최고지도자의 건강과 같은 북한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원인 등을 간략히 검토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 2. 북한 관련 언론 보도 문제점과 원인

○ 북한 관련 언론보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

- 이제 언론의 협조 없이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음.
- 정작 문제는 우리 언론의 북한에 대한 왜곡된, 혹은 잘못된 보도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고, 이 반발이 우리 사회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을 뿌리 깊게 만들어 정작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해도 호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점임.
- 북한이 자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상대가 아닌 주적으로만 규정되고, 교류협력 무용론으로 인한 단절이 영구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
- 오보기사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적 인식과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확산시키고, 이런 흐름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북정책은 보수화되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고착화되는 등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 관련 보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있다보니 많은 경우 상상력에 의존하기도 함.

- 이전과 달리 북한 보도 매체나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있고, 탈북자들이 가세해 북한 내부 소식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채널로 기능하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정보와 첩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

- 소문이나 억측들이 사실과 뒤범벅되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데, 옥석을 가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속보 경쟁에 따라 기사화되면서 북한 보도 시장은 혼돈의 바다에 빠져 들기도 함. 그래서 '북한 관련 보도는 특종 아니면 오보'라는 냉소적인 평가까지 나오는 것임.

○ 북한 관련 보도가 다소 막 나가는 것은 남북간의 깊은 불신과 관계의 경색과도 무관치 않아 보임.

-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아무래도 우리 언론들은 북한 관련 보도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교류협력의 파트너로서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 관련 인사와의 접촉이나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임.

-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단절이 장기화되면 보도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오보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상례화돼 있는 것처럼 보임.

- 오보에 대해 언론이 스스로 반성하거나, 남이 문제 삼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임.

- 북한 관련 보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특정 언론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인 편향성이 작용하고 있는 점임.
  - 이 역시 북한이 일정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이고, 3대 권력세습을 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 밖에 없으며, 개인승배와 부패 때문에 개혁·개방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됨.
  - 그래서 북한 관련 보도는 부정과 비판 일변도의 분석과 평가만이 나오고, 내부 소식은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부풀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럴 경우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엄연한 체제로서, 또는 나름대로 자기 합리적 논리를 갖춘 행위자로서의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됨.
  -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도 북한 뉴스를 당파적으로 다루는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임.
  
- 언론들이 대북 소식통발 북한 소식 검증 능력이 부재하고, 외신에 의존하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신변 이상설을 처음 전한 언론은 지난 4월20일 대북 소식통의 전언을 근거로 보도한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였음.
  - 이틀 뒤 미국 방송 CNN이 '김 위원장이 수술 뒤 위중한 상태'라는 정보를 미 정부가 주시한다고 보도함.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CNN을 인용하고, 국내 언론들도 이들 보도를 검증없이 받아쓰면서 신변 이상설이 광범위하게 확산됨.
  - 데일리NK 보도는 국내에서 별다른 파장을 낳지 못했지만, CNN을 비롯한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이 보도하자 국내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받아쓰기 보도'를 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평가됨.

- 과거에도 그랬듯이 외신의 추측보도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위기 조장 외신을 인용하는 보도 행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혼란속에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보력 부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냄
-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익명의 대북소식통의 말을 여과 없이 인용, 보도해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 조장에 영향을 미친 것임.

### 3. 북한 전문가들의 문제점

- 탈북자 출신 정치인, 전직 관료, 학자 등 자칭 북한 전문가라는 일부 인사들이 보여준 행태도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별반 다르지 않음.
  - 전문가 집단은 언론과 달리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보일수록 냉철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함.
  - 오히려 언론이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고, 언론과 함께 무책임한 정보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전문가들도 '소식통'이라는 이름 하에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을 국내외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로까지 확대·재생산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임.

## 4. 향후 바람직한 언론 및 전문가들의 자세와 역할

### □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분단언론의 막중한 사명

- 향후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확대재생산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언론과 전문가들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이 증가하는 등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언론의 특별한 사명과 선도적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횡행하는 부적절한 미디어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과 낭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함.
  
-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세와 태도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함. 즉 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여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함.
  -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 등 거취와 관련한 기사는 언론보도의 생명인 사실 확인에 충실하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보, 즉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의 경우 언론은 특히 국제사회를 의식한 보도를 해야 함.
  -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일수록 언론은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전문가 집단도 그것을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 □ 평화저널리즘 지향

- 상황이 어려울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화해와 협력의 입장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간의 불신과 대립의 장벽을 허무는데 기여하는 것이 분단된 나라의 언론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임.
  - 흡수통일과 조기 정권봉피를 희망하는 사고에 기초해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키는 분단저널리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함.
  - 국내외 언론이 북한측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유언비어 식의 기사를 양산하는 무책임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냉전시대의 특수 상황에서 언론이 대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언론 또한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임.
  - 이제 대북 관련보도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이념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됨.
  
- 북한 문제를 다루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달성되는 데 기여해야 함.
  - 국내 언론이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지향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외국 언론도 한반도 제반 문제를 평화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동참할 것임.
  -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분단 당사자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함. 그 역량을 세계는 남측 언론의 보도 논평을 통해 저울질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함.

- 국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통일은 요원한 과제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과 건강 이슈와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소재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평화 저널리즘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 언론 스스로의 자정 기능 강화

- 엄격한 처벌규정 등 언론에 책임을 묻을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일단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언론윤리강령(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는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 보도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는 오보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르지만 북한측에 대한 오보에 대해서 지금껏 문제로 제기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 북에 대한 카더라 식 보도를 양산하는 원인의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언론인의 윤리의식 제고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오보 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 스스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오보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 매체의 사례는 적지 않은 긍정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이 매체는 4월 26일 <오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알림을 통해 당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거 기사를 속보로

게재했다가 오보로 판명돼 즉각 삭제했고,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증대한 뉴스를 다룬 점에 깊이 사과하면서, 향후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각별히 힘쓰겠다는 약속을 함.

- 이에 그치지 않고 4월 27일 하루 전날(4.26) 오보와 관련 편집국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조치를 내린 바 있음.

## □ 북한 관련 보도 준칙의 제정과 준수

○ 오보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북한 관련 보도 준칙을 제정해야 함.

- 정치적 양극화와 편향된 정보 선택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이 가속화하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보도 준칙을 만들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추측성 기사나 과장, 왜곡된 기사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막기 위해 언론인들이 다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함.
  - 근거가 불확실한 북한 관련 보도는 반드시 정부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등의 준칙 제정의 목적이 담겨야 함.
  - 북한 관련 보도의 기본원칙\*과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세부 사항 등을 두루 담아 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언론으로 나아가는 초석으로 삼아야 함.
- \* △객관적 보도 △선입견과 고정관념 탈피 △남북간 상호존중하는 보도자세 △우리 시각과 민족화해 관점에서의 보도 △평

## 화지향적 보도 △남한 내 여론수렴과 남북갈등 해소 역할

### □ 언론사 자체의 정보판단 역량강화와 정부의 협조

-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정부는 최대한 북한 관련 정보를 언론 및 전문가 집단과 보다 폭넓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번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정부의 선명한 대언론, 대국민 설명과 구체적인 정보 공유가 무분별한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언론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소식은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해 보도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함.
  - 언론의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언론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근거가 미약한 주장을 단순 전달하기만 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언론사 스스로 북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량을 강화해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오보가 양산되는 과정에서는 해당 기자의 판단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사의 취재와 편집을 지휘하는 데스크(desk)의 오판과 경험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의 북한 관련 지식과 판단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평화 및 통일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특히 외신의 북한 보도를 분위기에 편승해 무비판적으로 따라 쓰는 태도를 지양해야 함.

#### □ 오보 방지, 정정 및 반론보도 등을 가능케 하는 남북간 협력시스템 도입

- 보다 근본적으로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언론 간의 상호 취재와 보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함.
  - 남북 간에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 오보, 심지어 날조 보도 등과 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를 취하면서 오보 방지, 정정 및 반론보도 등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남북대화 복원 계기시에 남북간 언론교류를 우선 의제로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 □ 전문가 집단의 윤리의식 제고와 새로운 분석틀 제시

- 평화로운 시기보다 위기의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북한 관련 오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의 중간에 위치한 전문가들의 윤리의식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전문가들도 언론인 못지 않게 사실확인을 끝까지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 모든 상황에서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전문가들은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표현과 용어를 사용해 북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토론이 이뤄지도록

록 이끌어야 함.

- 특히 전문가들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이 잘못된 보도로 이어져  
▲여야간 정쟁의 원인과 근거 제공 ▲정부의 적극적·개방적 대북 정책 수립·이행 주저 요인 ▲대북 적대세력의 행동 정당화 근거 ▲국민여론에 부정적 영향 ▲열린 남북관계의 환경 조성에 부정적 효과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적대 정책 형성의 논리적 근거 제공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 체제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야 함.

- 북한의 특수한 체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북한의 현상을 분석·평가해야 함.
- 무책임한 문제 제기나 의혹 확산에 일조할 것이 아니라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근거에 기반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북한 관련 언론보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존재의의를 보여줘야 함.

○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이해는 북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지속적인 동향 추적 등이 결합되어야 객관적인 정보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특히 오늘날 북한은 빠르게 변화하는 실체라는 점을 고려해 과거 보수적 분석틀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관점과 인식틀에서 바라보고 분석해야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인쇄** 2020년 5월 8일

**발행** 2020년 5월 11일

**발행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행인** 박재규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FAX** 02-3700-0767

**Homepage** ifes.kyungnam.ac.kr

**E-mail** ifes@kyungnam.ac.kr

**인 쇄** 두일디자인 (02-2285-0936)

---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